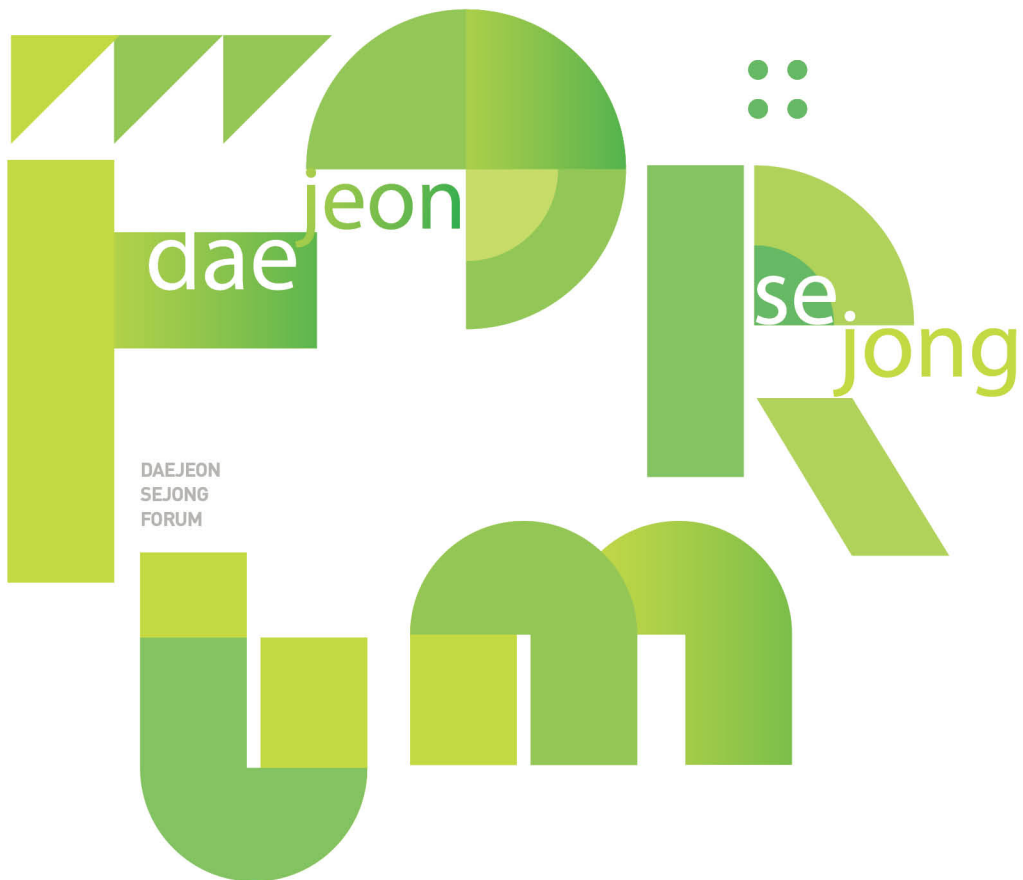


대전세종포럼

기획특집 2020년 중부권 광역 협력 방안

충청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현황과 계획과제
충청권 상생협력을 통한 광역행정 추진방안
중부권 관광연계협력 접근방향
중부권 산업경제 협력 방안
중부권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
유럽연합의 클러스터정책 - 지역/광역/국가 협력프로그램



시민이 행복한
미래 대전·세종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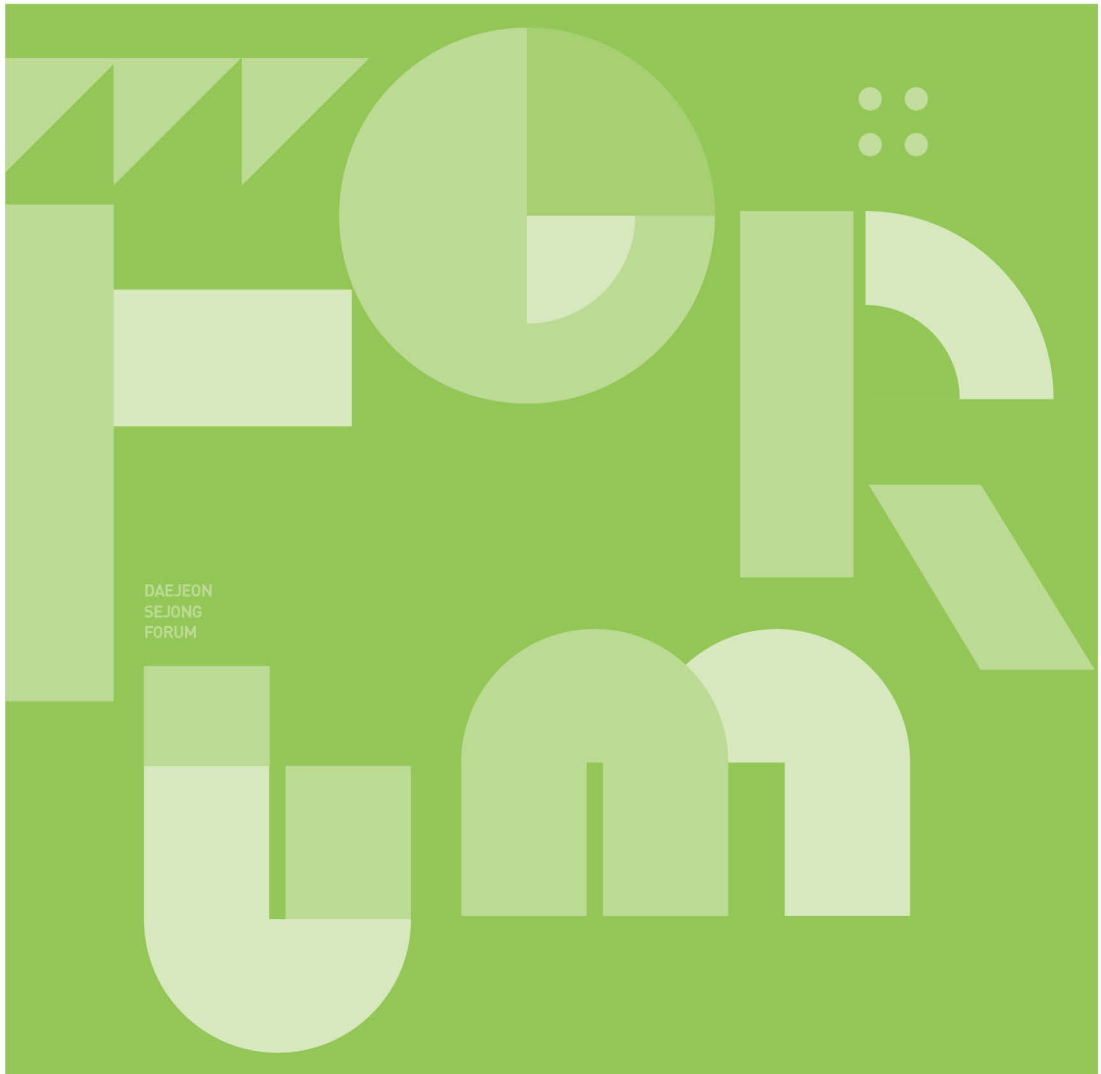
시민행복과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기관

목표 및 추진전략



대전세종포럼

2020 봄 · 통권 제72호



The background features a light green gradient with several large, overlapping geometric shapes in various shades of green and a muted purple. These shapes include circles, triangles, and rectangles, creating a modern, abstract design.

2020년 중부권 광역 협력 방안

2020 봄 통권 제72호

Contents

06

충청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현황과 계획과제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

충청권 상생협력을 통한 광역행정 추진방안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32

중부권 관광연계협력 접근방향

장인식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학부 교수

58

중부권 산업경제 협력 방안

윤영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8

중부권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96

유럽연합의 클러스터정책 - 지역/광역/국가 협력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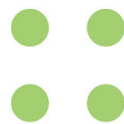
설성수 한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충청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현황과 계획과제

●
조 판 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청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현황과 계획과제¹⁾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머리말

지역의 현안은 여러 지자체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도시의 인구 증가 및 감소 문제 역시 어느 한 지자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별 행정구역을 넘어서 다수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광역적 차원의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충청권은 인구 550만 명 수준의 대도시권으로 성장하였다. 충청권은 세종과 대전의 국가행정기능, 대전과 청주의 과학·바이오 R&D 기능, 천안과 아산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국토의 중심부로서 철도, 도로망 등의 국가교통 결절지를 포함하여 많은 역량과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광역 핵심역량들이 연계가 잘 된다면 국가발전은 물론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충청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차원의 계획수립 및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적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각 거점 도시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수립 권역이 서로 중복되고 계획내용도 서로 맞지 않아 여러 부문에서 연계·협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행복청과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충청권의 동반 성장·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및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다.

1)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며, 「국토계획법」과 「행복도시건설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권역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으로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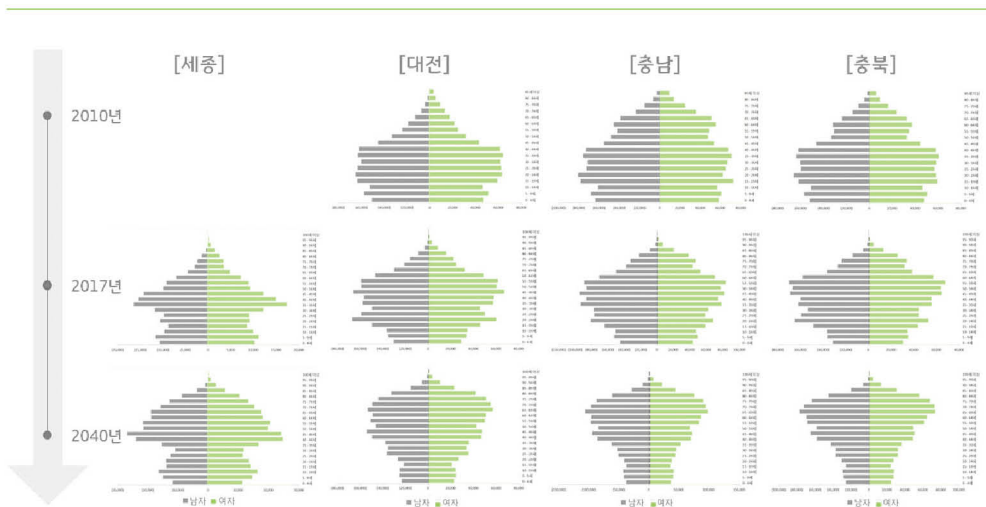
II. 충청권의 광역적 문제와 계획이슈

1. 충청권의 인구증가와 지역 간 불균형

충청권 인구는 2000년 약 480만 명에서 2018년 약 553만 명으로 약 72만 명이 증가하였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과 영남권 다음으로 큰 권역으로,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서울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등에서 유입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세종시가 주변 도시에서 인구를 유입하고 있어 충청권 내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대전시는 서울과 세종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세종으로의 유출이 가장 많다. 충북과 충남은 대전과 세종으로의 인구 유출이 많으며 경기지역에서의 유입 인구가 가장 많다. 세종시의 경우 3~4인 가족과 젊은 층의 인구유입으로 인구구조가 안정적이고 미래 전망이 밝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세종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은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대전의 경우 인구 150만이 무너진 상태이며 충북과 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고령인구가 많다. 향후 지역 간 불균형 현상, 세수 부족 및 SOC 공급의 어려움 등을 해당 지자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림 1. 충청권 인구구조(2010년~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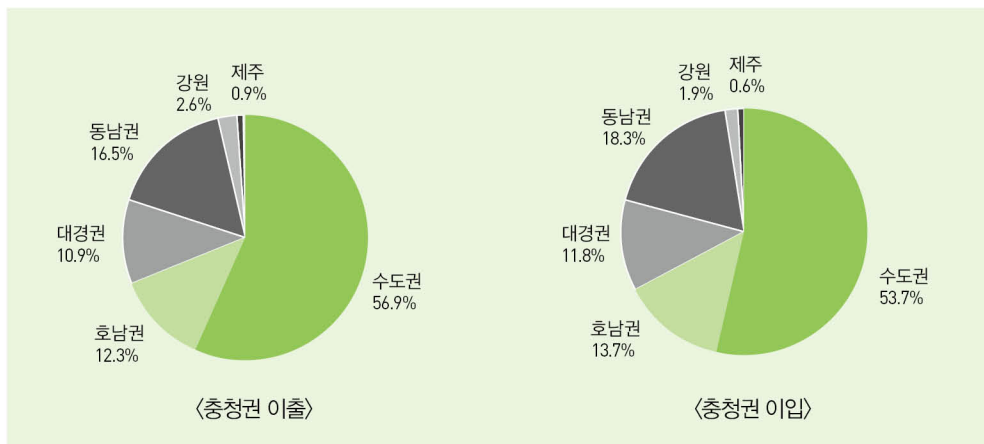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별 연령별 인구 및 장래인구추계(17년 기준)

2. 수도권에 의존적인 산업구조

충청권의 사업체는 전국 대비 규모에 비해 본사·본점의 비중이 낮고, 공장 등의 비중이 높아 지역 자생적 산업발달 양상 보다는 수도권 의존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국 대비 수도권 본사/공장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1.9%/21.8%인데 비해 충청권은 9.5%/11.8%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산업의 이출입 구조를 보면, 충청권은 수도권으로 이출되는 비중이 56.9%로 가장 높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입 비중도 53.7%로 가장 높다. 이처럼 충청권의 산업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충청권 북부 지역은 주요 제조업이 집적한 지역으로 충청권과의 연계보다는 수도권 남부지역과의 연계가 활발하다. 경기 남부지역 기업들 또한 충청권을 주요 구매처로 활용하고 있다.

충청권의 지역총생산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경제규모의 성장이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의 지역총생산과 1인당 지역 총 소득 모두 증가하였으나 소득증가율이 총생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도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과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및 민간소비를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연계성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특히 충청권은 연계성이 더욱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충북·충남지역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에 미달(2017년 기준)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충남지역은 지역 발전에 따른 주민의 체감도가 저하되고 있다.

그림 2. 충청권 주요산업의 이출이입 구조



3. 지역 간 갈등문제와 핵심역량들의 연계 미흡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유출, 교통망 노선, KTX역 신설, 지역인재 채용대상지역 등 세종시와 주변 도시 간의 갈등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인구불균형 문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특히 대전에서의 인구유출이 문제가 가장 대두되었으며 청주, 공주 등 충북과 충남에서도 인구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건설된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유입 외에 주변 도시들의 인구를 유입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와 대전시, 청주시, 공주시 등은 인구문제 외에 도시 간 연계성이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4개 도시의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각 도시마다 시내버스 요금 및 환승체계 등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등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많은 실정이다. 대중교통 외에도 충청권 광역철도망, 보령선, 충북선, 철도망 노선문제와 KTX 세종역으로 인한 충북과 세종간의 갈등 등 교통망으로 인한 충청권 지역 간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충청권은 지리적 특성상 각 시·도에 혁신역량이 밀집되어 있으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교통부문에서 청주에 국제공항이 있는데 대전, 세종, 충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공항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항만의 경우 평택·당진항과 대산항 그리고 보령항 등 다수 항만이 있으나 항만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인천항이나 평택항으로의 물류가 집중되고 있다. 국가기관 부문에서는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서 정부부처가 입지하고 대전과 오송, 오창에도 정부기관이 다수 밀집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산업부문에서는 대전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 충북은 바이오 분야, 충남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 등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이들 간 협력과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각 시도별 핵심산업이 겹치게 되면서 협력이 아닌 견제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지역역량 간에 연계보다는 도시 간 인구 유입·유출 문제, 간선도로·철도 노선 갈등, 대중교통 연결 문제, 산업기능분담 문제 등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된다면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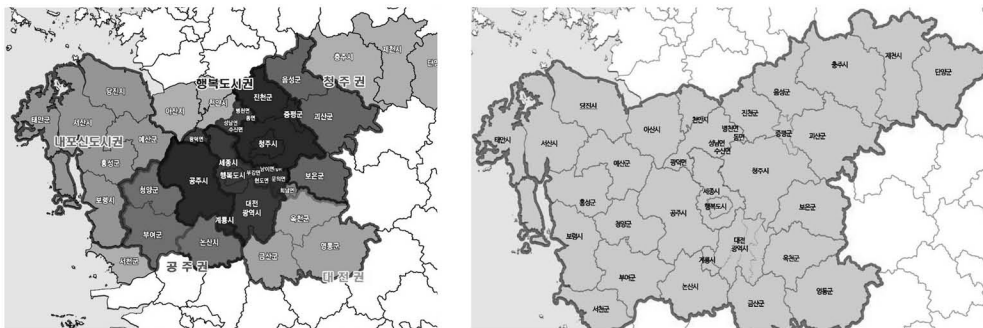
III. 충청권의 광역적 계획과제

1.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계획권 설정

충청권 상생발전의 취지에 부합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권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결합한 대도시권 계획은 지방도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이다. 또한 충청권을 네트워크 도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농어촌지역에 대한 해석·적용에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지방 시·군의 소멸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불균형과 직주불균형 같은 도시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도시권 정책 등 관련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청권이 통합된 생활권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권 형성 정도, 성숙도, 안정성 등을 진단하여 권역을 효과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수도권에 대응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거점대도시 영향권들의 기능적 특징과 중소거점도시 영향권들의 기능적 특징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 도시 체계로 설정하여 우려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감소시키고, 각각의 특성을 연계하여 충청권 전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권역을 설정해야 한다.

그림 3.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설정(안)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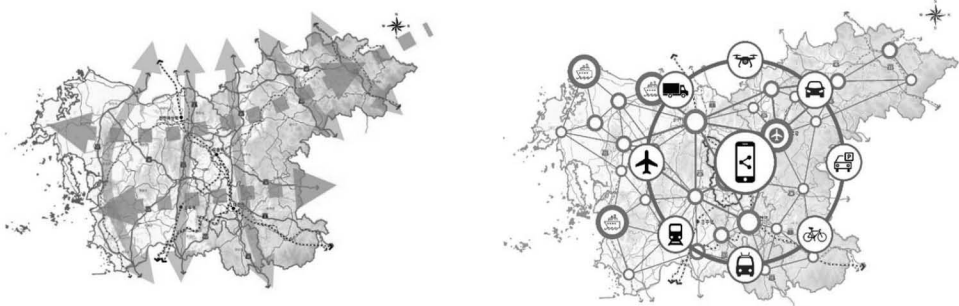
2. 국가 균형발전거점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광역대중교통체계에 의한 도시 간 네트워크 형성과 통합 광역도시권 구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 냄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충청권을 강호축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이끄는 선도 광역권으로 육성해야 한다.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대표 상생모델’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광역 BRT와 더불어 광역 BRT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충청권의 주요 거점 도시 간을 연계·순환하는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BRT 노선 확대, 시내버스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광역상생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철도망 역시 현재는 불균형적으로 분포한다. 우리나라 철도교통망의 경우, 경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의 교통망은 발달해 있으나 동서축은 수요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충청권 역시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의 교통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택시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요금체계 일원화 및 지역별 택시공급 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논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의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와 서해안 항만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망 및 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4. 충청권 교통인프라 확충(예시)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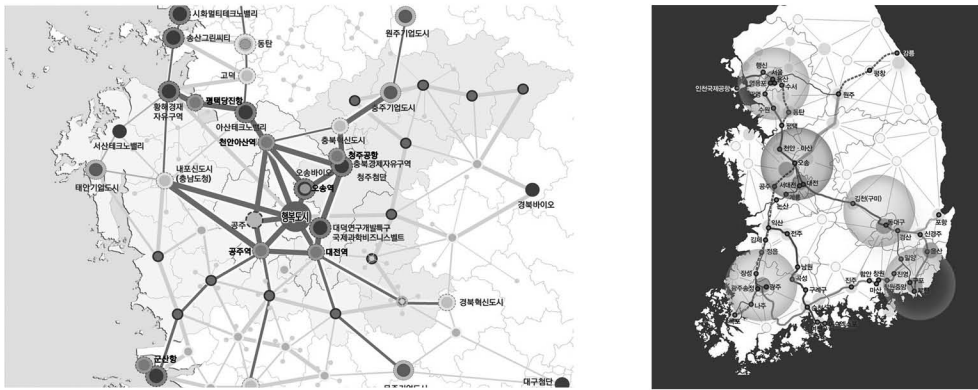
3. 충청권의 혁신역량 연계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충청권의 행복도시, 천안·아산, 오송·오창, 과학벨트, 대덕밸리 등 혁신역량 간 연계를 통해 핵심거점이 융합되어 중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행복도시와 내포신도시, 충북혁신도시 등 행정 및 공공기관 거점들이 연계·협력하여 중부권의 행정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기업 성장기반과 산·학 연계시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충청권의 동반발전과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국토 및 국가정책의 중심지로서 충청권을 국가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기술 전진기지’로 구축하여 국가정책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충청권은 각 지역 혁신도시와 함께 지방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서 충청권-혁신도시

거점 간 연계를 통한 국가 미래신기술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청권 지역 간 산업배치 및 기능분담을 통해 개별 자치단체의 주력산업 중복을 방지하고 광역권의 산업·경제의 지역 간 연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충청권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 마련을 위해 충청권 광역거버넌스 내에 광역 산업·경제 상생발전 협의체 등 협치기구를 설치하고 광역권의 산업·경제 발전과 협력사업 발굴, 충청권 혁신역량 연계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거점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림 5. 충청권 혁신역량 연계(예시)



자료: 저자 작성

4.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충청권에는 금강, 선비정신과 풍류가 담긴 누정문화, 백제 역사유적지 등 곳곳에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되어 있어 지역별로 이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및 관광 상품들이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관광 프로그램 및 관광 상품이 운영하다보니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주제별로 연결하여 광역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들을 연계·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 관광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통합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통합 관광추진체계는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거점별로 통합 관광브랜드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청권 광역 통합관광센터 형태의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진체계가 갖추어지면 각 지역별로 운영되어

오던 비슷한 주제의 역사문화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관광자원을 광역적으로 활용한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관광 루트와 사업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광역상생협력의 모델로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 충청권 역사문화자원 연계방안(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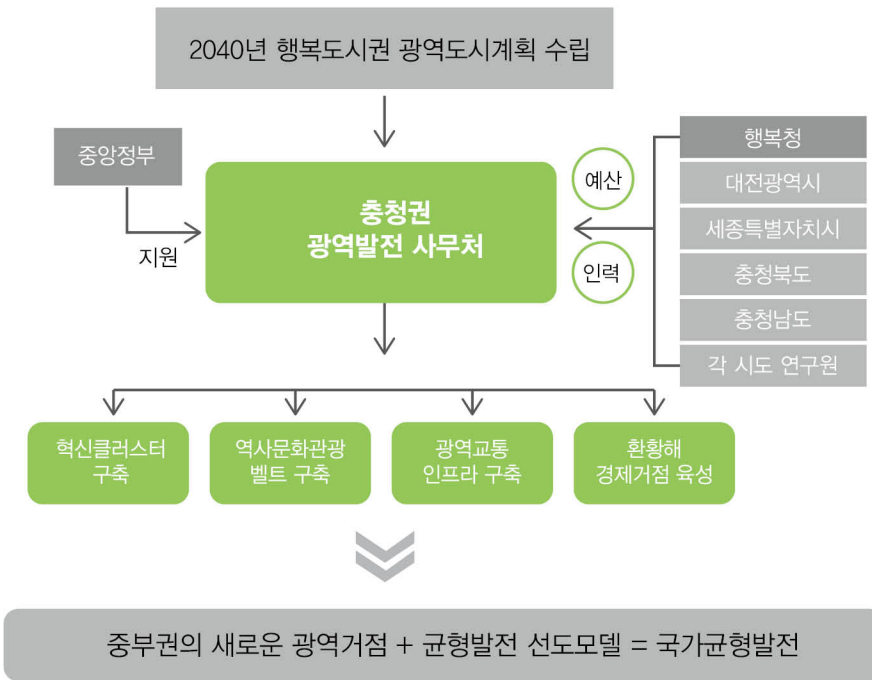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5. 충청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구 구성

행복도시 등 4개 광역도시계획은 최초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세종시 출범, 청주시 통합 등 주변여건 변화가 많아 변경 및 재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공적인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기획단'을 출범하여 광역권 범위 설정, 수립방향, 추진 방법 등 행복청과 4개 시·도 그리고 4대 연구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토대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존의 광역도시계획은 그 성격을 정책계획 또는 전략계획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또는 광역인프라 구축 등 특정 목적으로 수립되고 있었다.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한 실제 집행수단의 법적화가 필요하며,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 및 전략계획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협업사업에 대한 실제 집행수단으로서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며, 중앙정부-지자체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광역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기존 협의체와는 차별화해야 한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사업의 기획·실행·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으로 구성하여 상생발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수립 이후의 관리를 위한 광역행정조직으로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림 7. 충청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광역 거버넌스 구성(예시)



자료: 저자 작성

IV. 향후 추진계획

이번에 새롭게 수립되는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공동수립 취지에 부합하고 충청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광역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광역도시계획은 집행 및 관리 등 실행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충청권의 산업, 교통, 문화·관광 분야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협력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발굴하여 상생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광역적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충청권 광역상생발전 집행·관리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연계를 통해 충청권을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거점으로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권이 힘을 모아

상생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으로 시·도간 경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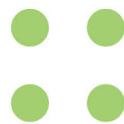
- 조판기 외, 2018, 행복도시·세종시 장기발전 방안 수립 및 지역개발구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충청권 상생협력을 통한 광역행정 추진방안

●
고 승 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충청권 상생협력을 통한 광역행정 추진방안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은 개별적 목표의 공동 달성을 위한 밀접한 관계라 할 수 있다. 협의과정 등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과 권한 및 역할을 교환하여 상호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협력의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들로 생활권과 경제권의 공유와 함께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비용절감과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한 지역에서 관리할 수 없고 관련 지역들 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및 지역갈등 그리고 정보화 및 교통의 발달에 따른 지역 간 교류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행정구역 중심의 행정수행에 익숙해져 있고,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조직과 역량의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자치단체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중심뿐만 아니라 기능적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의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충청권의 협력과 전략적 제휴,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의 기능적 발전은 충청권이 전국의 행정과 정책적 중심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충청권 내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협력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청권이 지닌 특성을 살펴보고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유형

1. 협력의 개념과 필요성

협력이란 자율적인 조직들이 지닌 개별목표의 공동적 성취를 위한 긴밀한 관계라 규정할 수 있다. 즉 서로 간 상호작용을 통해 교환 및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과 권한, 역할을 교환하여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협력은 대등한 상호관계성을 유지하여 공동의 이익과 목적달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모든 사회실체 간에 발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단체와 기업, 지역주민 간에 행태와 제도적 협력 또는 정신과 물질적 협력 등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대상에 따른 협력의 형태를 충청권 4개 시·도라는 사회실체에 국한시킴으로써 그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 형태의 국가운영에서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분권체제로의 변화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체제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분권화되고 다양한 정부관계로의 변화에서는 이에 상응한 밀접한 관계형성과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요구된다.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상호의존적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경쟁체제와 함께 협력을 통한 공생이 중요시 되고 있다. 협력관계 조성을 통해 각자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상호보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차원에서는 통합성과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구체화는 지역 간 중복투자의 방지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다. 다양한 공공시설의 개별설치를 방지하여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서비스의 공동제공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와 함께 협상과 토론문화 등 내적역량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공통문제에 대하여 서로 간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이익을 조정해 나가고 이를 통해 향후 협력증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행태 및 제도적 유형

자치단체 간 협력의 방식과 행태는 다음과 같이 자치단체 간 공동협약 및 제휴, 공동추진, 공동기구설치, 공동투자 등으로 정리되어 제시될 수 있다.

자치단체 간 공동협약 및 제휴는 개별 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동의 목표설정시 집행단계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공동추진협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공동으로 입안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협력의 형태이다. 공동기구의 설치는 공동의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여 공동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동투자는 규모의 경제에서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리적인 경계가 중첩되는 광역시설 또는 지역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합한 방식으로 대규모시설 건설 등에 적합하다.

자치단체 간 협력의 유형은 사무위탁과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으로 정리된다.

지방자치법 제15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광역문제에 있어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협력제도 중 하나이다. 특히 협력과 분업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주체를 만들지 않고서도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관례에 따라 협약의 체결, 조례 및 규칙의 제정을 통해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형화된 절차나 형식이 부재하여 오히려 적극적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협의회에 의해 규약을 정하여 운영되는 협력제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정을 제정하여 비교적 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광역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독자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협력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행정기구나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행정의 집행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과정의 기초단계로서 의미가 크다. 행정협의회는 주민생활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그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나 제도 자체가 지닌 분쟁해결능력 및 집행력의 부족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협의를 거쳐 규약을 정하여 설립하는 공법상 법인이다.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주체로서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행정협의회에 비해 집행력이 우월하고 유용한 협력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은 자치단체이며 구성에 있어 특별한 제한은 없고 처리사무 또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모두 가능하다. 선진 외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조합의 법적성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매우 제약되어 있어 활용은 극히 저조한 현실이다.

III. 충청권의 현황

1. 충청권의 일반적 현황

충청권은 국토면적의 16%에 이르지만 충청권 시·도는 국가 예산의 12%, 인구의 13%, 산업단지 수의 24%, 과학기술 및 서비스업의 8.3% 비중에 불과하며 미개발 국토인 성장촉진지역의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충청권 선상에 입지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전국의 인구는 약 1.6배 늘어났지만 충청권 인구는 1.18배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충청권 인구는 1970년대 전국의 15% 수준에 달했으나, 1990년대에는 전국대비 10.1%대 였고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18%이나, 충청권 시·도는 최근 3년 평균 대전(-0.60%) 인구는 감소하였고 세종(21.75%), 충남(1.00%), 충북(0.44%) 인구는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는 7,650천명이며, 전 국민(51,826천명)의 14.76%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충청권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17.54%)이며, 세종시는 9.59%로 전국 고령인구 비중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충청권 지역 내 총생산은 232조 393억원으로 전국 GRDP의 12.6%의 규모이며, 2013~2017년 5년 간 연평균 4.99% 증가하였다. 충청권은 인구와 사업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당분간 그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 시·도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3.3%로 전국 2.3%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산업도 54.32%로 전국 40.6%보다 비중이 높고 3차 산업은 42.42%로 전국 57%보다 낮다. 2018년 기준 충청권 시·도별 경제활동인구는 3,058천명으로 전국 27,895천명 대비 11% 수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3.7%로 전국평균 63.1% 보다 0.6% 높다. 실업률은 3.0%로 전국평균 3.8%보다 0.8% 낮으며, 15-64세 고용률은 66.9%로 전국 평균 66.6%보다 0.3% 높게 나타났다.

표. 전국 대비 충청권 현황

(단위: 명, 세대, m, km², 개)

구분	전국	충청권									
		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인구(명)	51,826,059	6,814,722	13.1	1,489,936	2.9	284,225	0.5	1,599,252	3.1	2,126,282	4.1
가구(세대)	22,042,947	2,399,558	10.9	624,965	2.8	123,762	0.6	707,220	3.2	943,611	4.3
면적(km ²)	100,363.7	16,637.65	16.6	539.35	0.5	464.87	0.5	8,226.14	8.2	7,407.29	7.4
면적(1km ²)당인구(명)	3,752.36	3,939.58		2,762.49		675.72		215.9		285.47	
주택(호)	19,673,875	2,166,120	11.0	597,736	3.0	104,325	0.5	629,073	3.2	834,986	4.2
예산(백만원)	310,161,212	37,409,808	12.1	7,616,345	2.5	1,723,055	0.6	11,596,721	3.7	16,473,687	5.3
경제활동인구(명)	37,547,041	3,917,720	10.4	1,100,703	2.9	220,126	0.6	1,131,730	3.0	1,465,161	3.9
(주민1인당)지방세수입(백만원)	77,913,997	7,660,490	10.4	1,759,737	10.4	621,480	0.8	2,025,096	2.6	3,254,177	4.2
산업단지 수(개소)	1207	293	24.3	4	0.3	16	1.3	119	9.9	154	12.8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시군)	22	4	18.2	0	0.0	0	0.0	2	9.1	2	9.1
도로 총연장(m)	110,714,298	15,988,578	14.4	2,140,388	1.9	402,441	0.4	6,942,571	6.3	7,159,852	6.5
도로포장도(m)	95,523,412	14,647,811	15.3	2,140,388	2.2	359,730	0.4	5,889,151	6.2	6,248,542	6.5
도로 미포장도(m)	8,249,118	7,982,535	96.8	0	0.0	0	0.0	534,993	6.5	505,774	6.1
공장등록(개)	192,244	22,630	11.8	2,982	1.6	787	0.4	8,648	4.5	10,203	5.3
자동차등록(대)	23,202,555	2,726,164	11.7	669,959	2.9	147,925	0.6	814,698	3.5	1,093,582	4.7
학교수(개)	11,976	1,623	13.6	313	2.6	90	0.8	486	4.1	734	6.1
관광숙박업(개)	1,843	93	5.0	20	1.1	0	0.0	32	1.7	41	2.2
제조업(개)	433,684	31,985	7.4	8,114	0.0	1,093	0.3	13,190	3.0	17,694	4.1
건설업(개)	94,094	16,294	17.3	4,037	4.3	478	0.5	5,220	5.5	6,559	7.0
숙박업 및 음식점업(개)	514,908	86,353	16.8	20,855	4.1	3,049	0.6	26,856	5.2	35,593	6.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개)	104,251	8,658	8.3	3,040	2.9	360	0.3	2,312	2.2	2,946	2.8

자료: 통계청_통계정보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공장등록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 시도별 통계연보(2018)

2. 충청권의 인프라 및 문화권

충청권의 혁신적 인프라로 세종시, 혁신도시(3개-충북혁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5-1구역, 내포신도시), 연구개발특구(본부 및 2개 지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 및 3개 기능), 경제자유구역(4개), 첨단의료복합단지, 신도시 및 16개 국가산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거대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식, 산업, 문화가 그물망으로 얽힌 거대 클러스터를 통해 새로운 지식, 산업, 문화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프라 간 인적, 물적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충청권 전략산업은 바이오의약 및 화장품(충북), 유전자약(대전), 수소연료전지(충남) 등으로 미래형 바이오 및 에너지 산업군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산업군은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로서 우리나라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표. 충청권 지역전략산업

구분	지역전략산업	강점
충북	바이오의약	• 오송 첨복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 입지
	화장품	• 화장품 관련 국내 우수기업 집적
충남	태양광	• 서산벤처밸리내 태양광 벤처단지 조성중
	수소연료전지	• 자동차 관련 R&D 지원기관 입주
대전	첨단센서	• 국내 최고의 기술·인력·시설기반 구축
	유전자약	• 기술집약·선도형 중소바이오벤처 집적
세종	에너지 IoT	• 에너지타운·신재생에너지밸리 조성(~20년)

주: 각 시도별 2019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 발췌·정리

충청권은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생명력이 시작되는 곳으로 국민의 일체감과 동질감을 부여하여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소로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엮는 거대한 국토축이며 생태계의 보고이자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 조건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며, 자연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자원 및 레저·스포츠 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

충청권은 유교문화권에 대한 문화관광적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충청권유교는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통한 내적 혁신을 창출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남아있는 유교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충청유교문화권의 입지는 타 문명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황해권을 끼고 있으며 유교와 불교, 천주교 등 갈등과 융화의 모습이 부각되는 곳으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문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명과의 화해와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인류공감문화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충청유교문화권의 관광자원분포가 4개 광역시·도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충청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연계 광역관광 개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충청권 유교문화재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충남	충북	세종	대전	계	
지정 문화재	계	400	272	10	101	783
	국가지정	56	15	0	9	80
	도지정	180	203	7	48	438
	문화재자료	164	54	3	44	265
비지정문화재	1,313	1,388	71	218	2,990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3.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운영

대전-충남-충북-세종 4개 시·도는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을 구성하여 충청권 공동현안에 대한 공조 및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며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해 2014년 12월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을 설치하고 운영을 위해 4개 시·도가 협약을 하였다.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의 주요기능은 충청권 행정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여 본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공동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상생발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표.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추진 경과

일 자	내 용
'13. 12. 31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기획단' 설치·운영 협약 체결
'14. 2. 3	설립 기획단 운영 개시(세종 새만금개발청 2층)
'14. 10. 22	'15년도 기획단 주관 운영 시·도 결정(대전) 1년씩 운영
'14. 12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설치·운영 협약 체결
'15. 1. 23	현판식 및 충청권 4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간담회 개최(충북)
'15. 12. 31	기획단 사무실 이전(충북→충남)
'16. 12. 31	기획단 사무실 이전(충남→대전)
'17. 12. 31	기획단 사무실 이전(대전→세종)
'19. 1. 1	기획단 이전(세종→충북)

2019년 기준 충청권상생협력단의 예산은 시·도별 43,500천원씩 분담하여 174,000천원으로 운영되었다. 조직은 각 시도별 1명씩 총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며 각 시도연구원에서 1명씩 비상주하여 지원하고 있다. 단장은 해당 시군에서 5급 사무관으로 임명하며 그 외 시군은 6급 팀장 3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 충청권상생협력단 주요 업무

팀	소 관 업 무
정책기획팀	- 상생협력비전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 충청권 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
사업발굴팀	- 연구용역 관리 및 상생협력포럼 운영 - 충청권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
행정지원팀	- 충청권 및 타 시·도 정책동향 수집 및 전파 - 기획단 운영 재원확보 및 집행 등

제25회 충청권행정협의회(14.9.6)에서는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동결의 하였으며 그 이후 제26회 (17.9.14)에서는 8건, 제27회(18.11.22)에서는 3건을 공동결의하는 등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2회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표. 충청권행정협의회 공동결의 사항

	공동결의 사항
제25회 충청권행정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광역철도, -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설치, -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 등 세종시 조기이전, - 통합형 국제교류, - 교황루트 관광상품화, - 학교 무상급식비 전액 국고지원 공동 노력, - 충청권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 발전 정책
제26회 충청권행정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특구~세종시(연서면) 일원 광역도로 건설, - 행정수도 개편, -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 건설, -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 세종역~청주국제공항 BRT도로 건설, - 금강 재자연화를 위한 생태복원클러스터 조성, - 보령~울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제27회 충청권행정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추진,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동대응, - 민선7기(시정3기) 충청권 공동공약 이행계획(안)

충청권 공조체계 강화로 지방분권 및 규제완화 등 정부정책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충청권 상생 및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소통확대를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정책이슈 및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자치단체 간 일체감 확대를 위해 수시로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도간 갈등 및 분쟁사안과 지역숙원사업을 관리하고 시·도간 인사교류와 시설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있다. 앞선 공동결의사업들을 관리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 추진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성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인적, 물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IV.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과 과제

1.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우선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분야에 있어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창출 등 4개 시·도 간 협력으로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 내 고용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회적경제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4개 지역이 상호연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의 발굴과 공동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교류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지역경제의 협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민간의 산업계 뿐만 아니라 연구소 및 지원서비스기관들과도 연계하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들은 경제적인 기대효과로 인해 주민들에게 협력사업의 이해를 구하는데 유리하다. 우선적으로 4개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여론을 주도하는 단체들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간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은 관광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교육과도 연계시켜 확대할 필요가 있다. 4개 시·도 간 문화적 협력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축제와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원의 교환과 공유를 통한 협력조건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청권은 같은 문화권 및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협력과 발전은 가능할 것이다. 현재 4개 시·도 모두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되거나 확장되고 있어 교육 시설과 청소년 관련 시설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교육공동체의 구성도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역복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자원의 공동운영을 통해 최대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통합운영을 통해 누구나 차별없는 서비스의 제공도 검토되어야 한다. 복지계획의 공동수립을 통해 광역적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상사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예산과 시설, 인력의 공동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시설기반 취약 및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의 차이로 서비스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개 자치단체 간 자원교환방식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구역을 달리한 주민 간 이질감 해소 및 공동체 의식 함양사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이용 및 지역자원봉사의 역량과

수요의 연계도 필요하다.

지역교육분야의 협력은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의 경우 글로벌인재육성이나 시민참여학교운영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평생교육의 경우는 찾아가는 교육 및 평생교육대학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를 구상하고 집행하며 평가할 수 있는 협의회 등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 협력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의 공동운영을 위해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역의 교육공무원 및 강사의 교류와 공동지원도 필요하다.

환경분야에 있어 환경자원 공동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수질관리 및 용수의 이용과 광역적 차원의 환경생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 광역적으로 분포된 자연 및 산림자원의 공동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기초시설 및 관련시설의 공동운영에 있어서도 광역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환경도시계획과 광역공급처리시설의 건설, 관리 등 광역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공동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상생협력을 위해서 재정과 인적자원, 협력적 리더십과 같은 공유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자원의 불합리한 전가와 부담은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한 분담이 중요하다.

교통측면에 있어서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내용과 부합되는 도로망체계를 구축하고 신설 교통망이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는 바 이의 효율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는 이해당사자들의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기존의 행정과정과 결과가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협력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지역의 통합적 이미지 구축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은 지역 간 상생협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과 함께 공동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고 가능한 모든 분야와 영역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 추진 노력이 필요시 된다.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충청권의 공동발전 전략과 지역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와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지역협력과 실천수단을 마련하는데 있어 4개 시·도가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시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지역협력계획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간 기능보완 및 협력체계의 구체화,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표로 세부적 전략도 수립되어야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은 공동으로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해 밀접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4개 시·도가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지역과의 공동발전 전략을 강구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를 위해 충청권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공동체의식을 지니기 위해 차이가 나는 행정서비스 부분을 찾아 질적 수준을 높이고 상호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영역들도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V. 결론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경제적 비용과 편익, 제도적 장치 및 공동협력기구, 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의지와 능력,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자원 및 문화와 이기주의 의식 등 예상되는 문제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또한 협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충청권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충청권의 공동현안이슈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정립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적 역할을 위해 국정과제로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 이러한 충청권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과를 이끌어낸다면 향후 충청권을 넘어 경기와 전북과도 함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시켜나가야 한다. 개별적 발전은 분명 한계가 있다. 지역권역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새로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때 지방화 시대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며 그 중심에 충청권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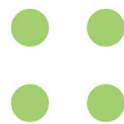
- 주재복 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서정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유인기재로서 재정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5권 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안권욱, “동남광역권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와 발전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 지방정부학회, 2012.
- 이원희, “자치단체 협력, 연계 촉진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32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0.
- 최영출, “영국의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제도와 제도효과 추정을 위한 정책시뮬레이션”, 한국비교정부 학보 21권1호, 한국비교정부학회, 2017.
- 부산광역시, 부산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사업활성화방안, 2016.
- 부산발전연구원,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2013.
- 수원시, 광역행정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중장기발전전략, 2014.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지역발전위원회, 2013.
- 충남연구원, 지방주도형 충청광역경제권 상생발전전략, 2013.
-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충청광역경제권 장기발전 구상 및 추진전략연구, 2010.
- 5+2광역경제발전위원회, 미래를 창조하는 지역 간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전략, 2013.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중부권 관광연계협력 접근방향



장인식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학부 교수

중부권 관광연계협력 접근방향

장인식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학부 교수



I. 서론

인간의 생활은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공간이란 인간을 포함해서 땅과 물, 공기, 동식물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유기적인 하나의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기에 일정한 규모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공간으로서 지역에 대한 정의내리기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책적인 편의상 행정적인 경계로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는 동질성과 상호의존성도 함께 묻어 있기도 하다. 동시에 지역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간에 수많은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성장과 발전 또는 정체와 퇴보를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늘 지역문제를 발생시키며 해결과제를 안겨 주게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과 충청북도라는 행정구역이 안겨주는 충청중부권 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지역들이라는 무리 속에서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하고 바로 잡는 노력은 언제나 필요한 사안인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변화, 기술혁신, 가치변화, 행정변화 등과 같은 과제에 맞서 격차 및 부조화, 단절이라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토종합계획」이다.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 아래 ①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②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토 ③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 국토를 목표삼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 또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비롯하여 '혁신성장 주도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및 '환황해권 시대를 여는 포용적이고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 그리고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축축의 중심, 충북'이라는 충청중부권 지역의 장기구상도 담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눈 여겨 볼 사항은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며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문화관광」의 등장이다. 6개의 발전전략 중 가장 앞서 위치하고 있다. 즉, 광역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개 이상의 시도가 연합하여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이다. 동시에 저성장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계획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편적인 문화관광 향유권에 대한 욕구대응도 가능하기에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매력 공간마련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것도 지역 간 협력적 관광자원의 발굴을 통해서 말이다. 이 같은 장기적 구상의 발판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현 정부의 5개년 관광진흥계획과 4회에 이르는 국가관광전략회의 내용이 바로 그러하다. 먼저 관광진흥기본계획에 있어서는 ①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지원 ② 휴가활성화 및 여행자보호 ③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④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⑤ 방한시장 전략적 다변화 ⑥ 방한시장 고부가화·고품격화 ⑦ 관광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⑧ 관광산업 규제개선 및 성장지원 등 8대 핵심과제이다(대한민국정부 2017).

한편 관광기본법(제16조)에 의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있어서는 1차에는 「심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차에 있어서는 243개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영상회의로 연결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대한민국정부, 2018). 세 번째 회의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개 부분(지역, 콘텐츠, 산업)에 대해 5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도 했다(대한민국정부, 2019a). 네 번째 회의는 「여행자중심 지역관광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관광혁신 추진성과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여행자의 관점에서 지역관광을 방해하는 ① 지역관광 정보 부족 ② 비자 발급 및 지방공항 등 출입국 불편 ③ 지역 내 관광교통 미흡 ④ 바가지요금 등 낮은 서비스 품질 4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제마련이 돋보였다(대한민국정부, 2019b).

아무튼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충청중부권(세종과 대전, 충남과 충북)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중장기적인 의도에 부합하고 자체적인 핵심 사업들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것도 서로가 연계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이미 중부권에서는 1995년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발족되고 1999년에는 정책 공조기구인 '대전·충청권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연합뉴스, 1999.3). 2004년도에는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의해 충청권 3개 시·도 민·관(民官)이 총망라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 충청권 협의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오 마이 뉴스, 2004. 12). 이어 2006년 8월에는 종전의 '충청권행정협의회'를 강화해 '충청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또한 충청권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구성, 지역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뉴시스, 2006. 12).

한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을 중심으로 4개 광역시도는 2015년부터 상생발전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협의·조정하는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실무전담기구인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대전일보, 2019. 5). 이 같은 활발한 움직임은 2016년 6월 충청권 4개 시도이외에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새롭게 가담한 7개 광역자치단체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창설하고 14개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과 4개의 숙원사업을 공표하기도 하였다(대전광역시, 2016). 아무튼 본 논고에 있어서는 그동안 충청권이라 불려왔던 대전을 포함한 4개 광역자치단체를 (충청)중부권이라 설정하고 이들의 관광현황과 여건들을 여러 동향(트렌드)과 관광환경 변화에 맞춰 연계·협력 할 수 있는 접근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관광분야 위상정리

1. 관광트렌드 읽기

트렌드란 사람들의 사고와 사상, 활동이나 일의 형세 따위가 움직여 가는 방향이나 추세를 뜻하고 있기에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해 감을 의미한다. 이는 '물길의 흐름'이라는 어원이 말해 주듯 물길 방향이 중요했던 농경사회처럼 오늘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전북일보, 2019. 1).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40년까지의 관광 메가트렌드를 인간(human), 지구(planet), 생산성(productivity), 정치(polity) 등 네 가지 범주에 초점을 두고 ① 여행수요의 변화(고령화와 신중세대의 성장) ② 지속가능성(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성장) ③ 기술진보(디지털 플랫폼과 신기술의 급변) 등이라 예견하고 있다(조아라, 2018). 국내에서도 2024년까지의 관광 트렌드로 ① 소소한 여행 ②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 ③ 경험하는 여행소비 ④ 누구나 즐기는 100세 여행 ⑤ 뉴 제너레이션의 활약 ⑥ 다이내믹(유동성과 다변화) ⑦ 관광시민 등장(여행가치 향상) ⑧ 모바일과 여행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⑨ 공유(여행 공간·이동·경험 연결) ⑩ 빅 데이터가 여는 AI 관광 시대 등 총 10개를 주목하고 있다(이원희 외 2019).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매년 국내여행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는데 2020년 국내여행 트렌드를 「R.E.F.O.R.M」이라는 6가지 키워드로 전망, 여행자의 취향이 세분화되고 있는 현상과 이에 따른 개인 맞춤형 여행선호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세계여행신문, 2019. 12). 참고적으로 2019년 국내여행 트렌드로서는 일상과 여행이 서로 분리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쉽게 전환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도록 나와 연결돼 있다는 '브리지(B.R.I.D.G.E.)'로서 언급했고 2018년에는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아 창의적인 색깔을 띠고자 하는 여행욕구와 SNS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유·피드백을 함축시킨 START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최근 세계 최대 숙박예약사이트 부킹닷컴이 발표한 <2020년 여행 트렌드 예측>에서와 같이 1) 지명도가 높지 않은 '숨은 여행지' 인기 상승 2) 추천정보 기술을 통한 미지의 체험과의 만남 3) 느긋하게 즐기는 여행 4) 다채로운 매력이 갖추어진 여행지 여행 5) 애완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6) 두 세대만의 여행 7) 미식 강화 여행 8) 은퇴세대의 장기여행 선호 증가 등은 매우 큰 의미를 보이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9a). 결국 향후 강한 지배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는 트렌드는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 '모바일과 여행 플랫폼 비즈니스', '경험소비, 여행 액티비티 전성시대', '소소한 여행: 소확행, 가심비, 가시비' 등이라 한다(이원희 외, 2019). 즉, 기술 발달에 힘입은 다양한 여행행태에서 점차 여행지에 대한 책임감, 현지인들과의 깊은 관계 구축 등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변화되리라 여겨진다. 이는 「느린 여행」과 「도전 여행」의 경쟁구조 속에서 「식도락 여행」을 공통분모로 지속성(안전과 책임)이 보장되는 형태로 이어지리라는 판단이다.

표 1. 한국관광공사의 연도별 국내관광 트렌드

구분	키워드	주요 내용
2020년	REFORM	여행자의 세분화 현상 → 개인맞춤형 중시
	Regional Creator	지역 관광명소를 발굴, 소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성장
	Enjoy & Critique Food	식사 종료는 별점과 함께. 여행자 모두가 음식 비평가
	Find My Trip	초개인화 시대, 세분화된 취향에 맞는 나만의 여행 찾기
	Other Destinations	붐비는 인기 여행지에서 쾌적한 숨은 여행지로
	Redesign With Technology	ICT 진화로 여행의 디지털화 가속
	Make Trips Nearby	짧게 자주 떠나는 여행의 일상화
2019년	BRIDGE	일상여가(여행) → 항상 일과 여가의 균형유지
	Break the Generation Gap	세대 간 모두 함께
	Recreational Activities	다양한 즐길 거리를 체험
	Influential Contents	영상에서 본 그 곳, 내가 간 그곳의 기록
	Delicious Foods	미각과 시각만족의 맛 집 음식여행
	Go Anytime	언제든지 일상생활처럼
2018년	START	나를 위한 여행 → 소셜미디어 공유 인증
	Staycation	근거리 여행중심의 여행의 일상화
	Travelgram	여행스타그램
	Alone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하지만 홀로 여행
	Regeneration	도시재생을 위한 원 도심 여행까지도
	Tourist sites in TV programs	방송의 영향(드라마와 여행 프로그램 등)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자료를 재정리

2. 관광여건과 현황정리

1) 국내여행 선호도

매년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관광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 및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국민여행조사」를 기준으로 목적지로서의 중부권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출범한 까닭으로 인지도 측면에서는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방문 만족도 측면에서는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업무로 방문했던 이들이 향후 여유를 가지고 재차 다시 찾고 싶다는 의향으로 풀이된다. 대전광역시는 당일관광객들이 점차 숙박으로 옮겨 가는 상황이며 큰 기대 없이

방문했던 사람들이 나뉘대로 실제경험 값은 컸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점점 훑어보는 방문지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체류하면서 더 있기를 바라는 상황으로 보인다. 충청남도는 숙박에서 당일목적지로 굳어지는 경향으로서 이는 아마 민선 6-7기의 관심부족, 접근성 개선, 타 지역의 경쟁추월 등이 이유가 아닌가 싶다. 동시에 만족도와 재방문 및 추천의사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는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충청북도는 마음먹고 찾아가는 방문지 성격으로 당일보다는 숙박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방문의 해보다는 점차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숙박관광의 하위권 형성은 열악한 숙박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부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결국 국내여행에 있어 중부권 4개 지자체의 관광행태는 목적지로서의 이미지 제고방안이 가장 시급하다 하겠으며 지방정부의 문화관광에 대한 진정한 가치 확립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경쟁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2. 중부권 여행행태분석

순위	방문선호(숙박)				방문선호(당일)				만족도		재방문 의향		추천의향	
	2018	2017	2015	2010	2018	2017	2015	2010	숙박	당일	숙박	당일	숙박	당일
1	강원	경기	경기	강원	경기	경기	경기	경기	제주	세종	제주	광주	세종	대구
2	전남	강원	강원	경북	경남	서울	서울	경남	세종	전남	광주	서울	제주	전남
3	경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경북	대전	전북	전남	대구	대전	전북
4	경북	경남	전남	경기	경북	전북	경북	서울	대구	대구	충북	전남	대구	광주
5	부산	전남	경남	경남	강원	전남	경남	충남	전남	광주	서울	경북	전남	경북
6	제주	경북	경북	서울	전남	경남	전북	전남	서울	강원	부산	강원	경남	인천
7	경기	서울	서울	전남	전북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전북	충북	충북
8	충남	전북	전북	충북	서울	충북	부산	부산	강원	대전	경기	충북	부산	울산
9	전북	부산	부산	전북	인천	부산	강원	강원	경북	충남	경남	충남	경기	강원
10	충북	제주	제주	부산	부산	인천	충북	충북	경기	경북	경북	대전	강원	부산
11	서울	충북	충북	제주	충북	대전	대구	대구	경남	부산	충남	인천	경북	충남
12	인천	인천	인천	인천	대전	강원	대전	인천	부산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세종
13	대전	광주	광주	대구	대구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울산	울산	경남	충남	서울
14	대구	대구	대구	대전	광주	광주	광주	울산	전북	인천	세종	경기	울산	대전
15	광주	대전	대전	울산	울산	울산	울산	광주	인천	경남	전북	제주	전북	경남
16	울산	울산	울산	광주	세종	제주	제주	제주	광주	경기	대전	울산	서울	경기
17	세종	세종	세종	-	제주	세종	세종	-	울산	제주	인천	세종	광주	제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2) 관광산업 여건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기준으로 살펴 본 중부권의 산업여건은 대전 799개소, 세종 129개소, 충남 1,191개소, 충북 924개소 등 총 3,043개로서 전국 사업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여행업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원시설업과 관광식당업, 관광객이용시설업(야영장업 4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개), 한옥체험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관광호텔을 비롯한 관광숙박업이 전혀 없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여행업이 전체의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국제회의업, 관광호텔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해외 송출형 여행사 중심과 매년 줄고 있는 관광숙박업, 유성관광특구의 쇠락 등과 같은 문제와도 연관된다. 충청남도는 비교적 고른 관광사업 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영장업과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다양화가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특정 서해안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에 관광식당업과 한옥체험업 등과 같은 편의시설업에 대한 확장이 필요해 보인다. 충청북도는 충남과 비슷한 산업여건을 지니고 있다 하겠으며 관광면세업과 관광궤도업, 관광펜션업, 관광극장유형업 등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가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따라서 청주공항과 속리산 관광특구 등의 이점을 살린 투자유치가 관건이라 여겨진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해외송출 중심의 여행업에서 탈피할 수 있는 체질개선과 3개의 관광단지, 47개의 지정관광지, 5개의 관광특구 등의 정상화 노력 및 관련 중앙부처의 관광업무 활용사업을 발굴하고 연계시킴이 관건이라는 판단이다.

표 3. 중부권 관광사업체 현황

구분	합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	관광편의시설업			
			호텔	기타					관광식당	순환버스	한옥체험	기타
서울	11,956	6,632	332	121	1,291	642	0	293	460	2	138	45
부산	2,329	1,592	82	81	171	70	2	153	142	2	2	32
대구	757	980	23	3	51	39	1	62	97	4	24	30
인천	1,137	584	81	76	150	17	1	179	0	3	12	34
광주	867	679	13	1	30	22	0	63	49	0	9	1
울산	563	347	16	1	34	9	0	74	45	1	2	14
대전	799	576	15	1	13	38	0	84	59	0	0	13

구분	합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	관광편의시설업			
			호텔	기타					관광식당	순환버스	한옥체험	기타
세종	129	88	-	-	7	3	0	21	7	0	4	1
경기	4,905	2,634	123	55	653	56	0	723	398	8	46	207
강원	1,599	598	43	104	557	20	1	118	29	11	32	86
충북	924	549	19	13	177	5	0	103	12	0	28	18
충남	1,191	642	16	23	200	2	0	138	21	0	43	100
전북	1,711	880	25	22	266	11	0	115	80	2	247	60
전남	1,806	820	40	245	193	6	0	113	7	6	303	73
경북	1,955	839	41	45	327	17	0	180	10	3	402	91
경남	1,953	1,038	56	65	299	18	0	216	54	11	50	150
제주	2,059	1,133	122	292	97	30	8	73	155	1	0	143
합계	38,640	22,609	1,046	1,148	4,524	1,007	13	2,731	1,625	54	1,342	1,118

자료: 한국관광협회중앙회(2019), 2019 관광사업체 통계

3) 관광행정의 위상

관광정책은 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체가 취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조직(組織)이라함은 인간의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협동시키기 위한 목적 실현 수단을 일컫고 있기에 관광조직 역시도 관광진흥을 위해 마련된 여러 시책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여기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크게 정책, 기획, 개발, 규제 등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관광행정을 비롯하여 조사연구, 교육과 훈련, 마케팅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관광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국관광객 유치에 비롯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의 개선, 관광자원의 보호,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 관광지 지정과 개발,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운영, 기타 지역관광 활성화 등이 중심이다. 늦게 출범한 세종자치특별시는 여전히 충남 연기군 때와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인력과 예산이 하위권 수준이며 충남과 충북은 나름 서부내륙권과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인해 중상위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전국 평균(인력정원 31명, 예산 454억)으로만 보아도 개선 여지는 매우 커 보인다.

표 4. 중부권 관광행정위상

지역	국	과	정원(명)	예산(억원)
서울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5팀 관광산업과 4팀	46	647
부산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5팀 마이스산업과 3팀 엑스포추진단 5팀 해양레저관광과 2팀	97	493
대구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4팀	23	280
인천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5팀	24	216
광주	문화관광정책국	관광진흥과 4팀	19	178
울산	문화체육국	관광진흥팀 5팀	24	305
대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케팅과 4팀	17	215
세종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문화재과 2팀	7	23
경기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4팀	20	518
강원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4팀 관광개발과 4팀	43	594
충북	문화체육관광국	관광항공과 5팀	24	233
충남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6팀	26	735
전북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5팀	25	688
전남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 4팀	24	778 *
경북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3팀 관광마케팅과 4팀	31	569 *
경남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5담당	20	448
제주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정책과 5팀 투자유치과 4팀 관광문화재과 2팀 카지노감독과 2팀	55	798

* 는 제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인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4) 관광분야의 경쟁력 정도

중부권 관광여건과 현황이 과연 국내 다른 지역과 어느 정도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018년 한국공사가 시행한 관광경쟁력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순위가 충남(11위), 대전(15위), 세종(16위), 충북(17위) 순으로 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9b). 이는 5개 부문에 42개 지표로 분석되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관광정책지수와 관광지원집적 지수를 기준으로 지역을 유형화하여 A형(57개), B형(59개), C형(32개), D형(78개)으로 나뉘는기도 하였다. 그 중 유무형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적극적인 관광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지역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 하는 지자체의 A형 그룹에는 충주시(107.9), 공주시(106.7), 청주시(105.4), 보령시(102.4), 태안군(101.5), 아산시(99.9), 서천군(99.9), 유성구(98.3), 당진시(93.1), 진천군(91.8) 순으로 총 10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2018년 민간영역에서도 17시도 229시군구에 대한 경쟁력 진단을 한 바, 그 특징들의 정리가 가능하다. 먼저 세종시는 깨끗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청결과 편의, 안전측면에 있어서 좋은 평가(전국 1위)를 받았으나 자원풍족도와 여행만족도는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전시는 유성온천을 필두로 젊고 세련되었다는 이미지는 강하나 관광자원 및 여행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대신 교통과 편리성 등 여행환경은 5위를 기록했다. 특히, 음식부문에서 성심당(빵)으로 인해 1위를 차지했고 한화이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가족적이고 인심 좋고, 한적하고 보존이 잘 되었다는 이미지 우세에 상대적으로 불-살-설거리와 물가 측면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중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천자원으로는 지역 축제, 워터파크, 박물관, 수산물 등이 많이 언급되었다는 결과이다. 끝으로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가족적이고 물가가 싸며 한적하고 소박한 이미지에 비교적 설거리 자원이 강세인 지역으로 산과 계곡, 농산물과 등산, 캠핑, 호수 등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가 있는데 이는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자가진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발전 정도를 정확히 판단해보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의 관광기반시설 여부, 관광객 수,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등을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34개 세부 지표로 구성해 평가하며 결과는 1~6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한다. 2019년에는 강원, 제주, 전남, 경기, 경북 등 광역지자체 5곳과 평창, 여수, 정선, 경주, 순천, 울릉, 속초, 거제, 창원 등 기초지자체 9곳이 관광을 누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관광객 방문이 활발한 '관광발전지역'(1등급)으로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 2019b). 하지만 중부권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충남과 충북이 관광정책역량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에는 공주시와 아산시가 관광수용력 측면에서, 서천군과 제천시, 충주시가 관광정책역량에서 1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들로 살펴본 중부권의 관광여건이란 개인기에 의존한 스포츠 경기처럼 기존의 자원우수지역에서만 주도하는 산발적인 현상이라 판단된다. 그것도 지속적인 상태보다는 담당부서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고 중앙에 극히 의존하는 형국이라 평하고 싶다. 따라서 결국에는 옆을 쳐다 보며 함께 할 수 있는 협업의 당위성도 엿보인다 하겠다.

표 5. 2019년 관광경쟁력 진단결과 순위

구 분	종합(점수)	관광정책	관광자원집적	관광수요촉진	포용적성장	관광성과
서울	1(602)	11	1	1	4	2
부산	4(539)	8	9	7	2	3
대구	10(480)	13	13	12	7	5
인천	12(468)	14	12	11	14	7
광주	13(457)	7	15	14	15	13
울산	14(450)	6	16	17	11	16
대전	15(442)	12	14	15	16	12
세종	16(438)	17	17	16	12	14
경기	6(530)	16	2	3	9	6
강원	2(571)	1	3	2	3	4
충북	17(432)	10	11	13	17	17
충남	11(471)	9	7	10	13	15
전북	7(513)	5	8	5	5	11
전남	8(507)	4	6	6	10	8
경북	5(531)	3	4	4	6	9
경남	9(501)	15	5	8	8	10
제주	3(566)	2	10	9	1	1

자료: 한국관광공사(2018), 관광경쟁력 진단 및 분석보고서.

3. 지금까지의 준비계획들

1)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출범한 관계로 관광측면에서 다소 부진한 세종은 전국의 약 0.2%를 차지하는 방문객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련되고 이국적인 이미지에다 미래지향적인 행정복합도시라는 이점을 활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지역에서 가장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서는 산림박물관, 베어트리파크, 세종에머슨 순이다(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7). 한편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살기 좋은 품격도시, 지속가능 혁신성장, 상생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아래 7개의 목표와 34개의 전략, 144개의 세부과제를 공약으로 삼고 있는 시정 3기에 있어서는 김종서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을 비롯하여 의료문화관광 복합리조트 추진, 고북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세종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농촌체험 관광형 도토리 파크 조성 왕의 물 축제 확대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세종특별시, 2020). 특히, 지역사회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 방안 정립과 지역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6차 세종권 관광개발 기본계획(2017~2021)에 의하면 「전통문화와 도시관광이 어우러진 행복한 세종」이라는 비전하에 ① 품격 있는 생활관광 도시 ② 생동

하는 젊은 매력도시 ③ 조화로운 활력여행도시 ④ 상생하는 문화공간도시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2016), 이를 위해 총 8개의 추진전략과 6개의 전략사업, 8개의 관광진흥사업, 4개의 신규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매년 세종시 전체예산의 0.2%(약 23억원)를 배정받고 있는 관광분야가 5년간 총 1,044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 현실과 거리가 있기도 하다. 그래도 역사문화권(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전통재생문화권(조치원읍, 연서면, 장군면), 신도시행복관광권(아름동, 한솔동, 도담동, 연기군), 금강향토관광권(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등 4개의 개발소권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꾀한 사실은 나름 의미가 있다 하겠다.

2) 대전광역시

2019년부터 3년간을 「대전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여행의 선도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비전으로 2022년까지 방문객 천만 명을 목표로 문화, 과학, 힐링, 재미를 컨셉 삼아 ① 새로운 여행 콘텐츠 개발 ② 상설여행 상품개발 ③ 신규여행 인프라 구축 ④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대전광역시, 2019a). 현재 대전은 국내여행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20대 중심의 젊은 층들이 많이 방문하는 행태이다. 관광자원과 여행객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은 5위로 나타나고 있다(세종관광산업연구소, 201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이미지를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동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대전의 문화융성 시대를 열겠다는 민선 7기 정책을 「7030 大田, 문화융성도시 大田으로」라 정해 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① 맘껏 즐기고 창작하는 문화도시 조성 ② 다시 찾고 싶은 대전형 관광모델 육성 ③ 열과 혼이 담긴 문화유산, 품격 향상 ④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건강도시 조성 등으로써 문화예술예산 5%, 대전 관광 1천만 명 유치, 생활체육 참여율 70% 만들기를 통해 삶이 있는 문화와 건강한 스포츠를 통해 대전의 미래를 열겠다는 것이다(대전광역시, 2018). 이외 에도 민선 7기의 5대 분야 91개의 공약 중 브랜드 공약에도 포함된 ‘보문산 일원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충청권 유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반려동물공원 조성, 숲 건강센터와 체험공간 설치, 원도심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대전광역시, 2019b). 한편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6차 관광개발 계획에 의하면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이 행복한 녹색·융합 관광도시」라는 비전하에 ① 상생 관광도시 ② 행복 관광도시 ③ 녹색 관광도시 ④ 융합 관광도시라는 4대 목표, 11개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공약에 포함되었던 보문산 관광개발과 반려동물공원과

같은 2개의 핵심사업을 포함, 14개의 관광진흥사업을 담고 있다(대전광역시, 2017). 하지만 대전시 역시도 5년간 총 3,241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무리한 계획이라는 판단이다. 그래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방향성으로 기존의 자원별 소권구분보다 더 현실적인 5개 행정별 소권에다 원 도심이라는 공통문제를 추가해 6개 소권구분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높아 보인다. 특히, '전국형 명소 만들기' 제안이 눈에 뜨인다.

3) 충청남도

2018년을 기준으로 독립기념관(163만명), 해미읍성(114만명), 금산인삼관(101만명), 국립생태원(86만명) 등의 순으로 높은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는 충남은 주로 경기도와 인근 지역에서 방문, 국내여행객의 약 6.1%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8). 11대 분야, 41개 중점과제, 116개 세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선 7기 공약들에서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안면도를 '국제관광 특구'로 지정, 관광 인프라 및 편의시설 구축으로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안면도 국제관광 특구 지정을 비롯하여 충남관광 전문기관 설립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복원정비사업 지원,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설립, 칠갑산 중심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지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 백제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2020 계룡세계 군문화 엑스포 지원 등이 있다(충남도청, 2019). 한편 2021년까지의 법정계획인 제6차 관광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설렘가득 행복중심 충남관광」라는 비전아래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37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내포문화권, 해양레저권, 백제문화권, 호국온천권, 군사유교권이라는 5개 관광소권을 구분 짓기도 하였다(충청남도, 2017). 하지만 충남 역시도 3개 관광지 개발에 6,352억원, 19개 전략추진사업에 2,774억원, 11개 관광진흥사업에 259억원 등 총 9,38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비가 소요되기에 현실성 측면에 있어 많은 의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도 2018년 공주시와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이 금강을 매개체로 한 2030년까지의 장기적 안목으로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충청남도, 2018)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고 올해에는 ① 충남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고 ② 이웃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③ 국가 정책을 선점하고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④ 10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대규모 단위 사업들로 10대 과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 중 충남형 해양치유 서해안 벨트 구축, 충남 레저관광 활성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조성, 구)장항제련소 국제적 생태관광지 조성,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된다(충남도청, 2020).

4) 충청북도

충남과 유사하게 경기도를 중심으로 국내여행객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3시 8군으로 물가에 대한 평가가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적하고 소박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세종관광산업연구소, 2018). 그래서인지 100만명 이상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가 단양의 도담삼봉, 사인암, 구담봉보은의 속리산 국립공원, 괴산군의 산막이 옛길 등 비교적 많은 편이다(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8). 민선 7기의 공약에 있어서는 5대 분야 130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유치 및 노선 다변화, 미호천 친환경 생태·휴양 공간 조성, 속리산 관광활성화 지원, 증평 에듀 팜 특구 국민관광단지 조성, 해외의료 특화병원 육성,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인프라 구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충청북도, 2019).

한편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관광, 충북」이라는 비전아래 ① 국토중심 힐링: 슬로우 관광거점화 ② 지역별 테마관광 활성화 및 외연 확장 ③ 창조적인 관광진흥사업 육성이라는 3대 목표에 39개의 관광개발사업, 13개의 관광진흥사업을 마련해 놓고 하였다(충청북도, 2017). 그 중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융복합형 관광중심지대로 충북관광소권을 설정하였는데, 관광환경과 자원분포, 접근성, 관광개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색다르게 수변산악형 명품휴양 관광권, 생활밀착형 웰빙 관광권, 고부가가치형 바이오헬스 관광권, 향수감성형 치유 관광권 등 4개의 소권으로 기능별 접근을 시도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4개 소권별로 주기능, 부기능, 잠재기능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형성한 접근방법은 매우 탁월하다 하겠다. 특히, 충북관광의 외연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제시한 위계별 광역관광루트(충북권 관광벨트, 중부내륙권 관광벨트, 특정역사문화 체험관광벨트)구축은 실로 눈에 띄는 구상이다. 그래도 여전히 총 39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7,116억원, 총 13개의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139억원에 대한 투자비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리 시원시원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민간투자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단계별 방안 제시는 비교적 모범적인 내용이었다.

III. 관광분야 연계협력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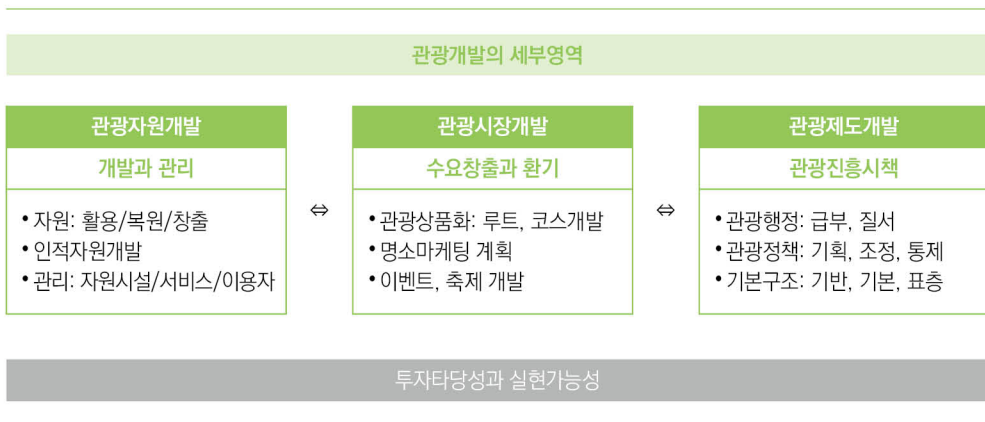
1. 기본적인 접근구조 형성

관광이라는 현상이 매우 유동적이고 다면적이며 그 범위가 넓어 그리 쉽게 정리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관광을 통해 의도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과 단순히 관광과정에서 필요한

세반 요소를 확보한다는 접근은 가능하다. 즉, 관광 진흥 및 육성과 같은 폭넓은 해석이나 아니면 관광자와 관광지역의 희망조건만을 충족시켜주는 좁은 해석이나에 따라 방향을 가늠할 수는 있다. 한편 개발에 대한 해석을 경제적 중심의 생존형(self-sustenance)인가, 분배와 자립 중심의 자존형(self-esteem)인가,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자유형(freedom from servitude)인가에 따라서도 관광개발의 목표와 방향은 결정된다. 따라서 관광개발 역시도 그 적용범위와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성격 자체가 좌우된다 하겠다. 결국 관광개발이란 관광자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찾아내거나 높임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경험을 보장,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자원성만이 아닌 시장성과 수용능력 등이 충분히 검토되는 새로운 접근체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먼저 관광자원개발은 관광객이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활용방안을 시작으로 잠재력 높은 매력개발, 또는 새로운 신규자원의 발굴과 창출노력이 포함된다. 동시에 기존이든 신규이든 간에 자원으로로서의 가치유지 노력과 이용자를 위한 경험의 질 보장, 그리고 수급간의 균형유지를 위한 제반적인 서비스 관리 등을 이에 포함된다. 관광시장개발은 관광 상품화(merchandising)를 중심으로 관광루트와 코스를 개발하여 기존의 관광자원들에 대한 상품가치를 향상시키거나 고유성과 표준성을 조절하여 마케팅적 사고에 입각한 관광객 욕구만족을 위한 노력, 기타 일시적 수요환기나 신규수출을 위한 여러 형태의 이벤트를 만들어 내는 것들을 포함된다. 끝으로 관광제도개발은 현실가능성을 감안하여 개발주체에 대한 내·외부적인 여건을 향상 시킨다는 부분으로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과 방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관광 인프라와 같은 기반부문과 관광활동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숙박·위락부문, 기타 관광지역에서의 친절과 같은 서비스부문 등으로 구분된다 하겠다. 이렇듯 오늘날의 관광개발은 막연한 기대나 한정된 의지로서만 접근하는 분야가 아니라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 과제와 목표 등을 기초로 기본방침이 세워지고 개발내용과 방법, 추진주체와 순서 등이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원조건이나 시장조건, 개발 시기, 경영조건, 재정조건 등은 실현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관광자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변화를 연속시키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세련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경쟁력 높은 구매가치를 통하여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유인력이 있어야 하고 부단한 노력과 홍보작업을 통하여 그 생명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더구나 해설기능과 다양화 작업이 부족하여 일반상품이 지니는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개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여 로드 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충청방문의 해」 사업과 충청광역경제권 장기발전(2012~2020) 구상계획, 충청권 포도·와인산업 선진화방안

(2012),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2016) 등과 같은 광역 형태의 기존 계획들도 있으나 이들 모두가 중앙정부에 의한 시도였기에 자체적인 중장기 구상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1. 중부권 광역관광개발의 기본구조



2. 광역연계협력의 정책목표: 품질향상과 품격완성

관광이란 타 지역의 이색적인 문화를 본다(觀國之光)는 뜻이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와 지방화, 표준화와 고유화, 협력과 경쟁, 내부적 복지와 외부적 접객 등 서로 상반된 환경들과 어울려 이들을 서로 지혜롭게 조합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고민이 요구된다. 즉, 지역 주민의 희망조건과 방문객 경험의 질 보장, 지역의 자연인문환경의 보전 등이 서로 균형점을 이루어지는 방책(方策)이 지속가능한 문화관광개발이 되는 것이다. 여러 상황을 파악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통제 가능한 사안들과 통제 불가능한 사안들을 구분 지어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들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충청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관광수용기능이 취약한 입장에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중하게 하나씩 엮어 나가야 한다.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계획은 미래를 위해 더 유용하다는 기초지식에 부합시켜, 지역과 관련된 수많은 이미지들을 단순화시키고 이를 전략적인 형상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하여야 하겠다. 충청권 지역은 상생전략과 차별화전략이 동시에 필요한데, 전자는 중앙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상위계획에 충실하면서, 인근 수도권 및 인접지역과의 협력 사안을 찾아보는 것이고 후자는 내생적 개발(endogenous development)을 중심으로 독창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동시에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품질향상과 품격완성을 목표로 접근하는 방안도 필요

하다. 품질향상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 대하여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품격완성은 국제적 수준으로서의 체질개선과 영역확대를 의미한다.

그림 2. 충청권 문화관광개발의 기본방향



3. 상생전략: 위로부터의 접근

먼저 상생적 접근방법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수용 가능한 내용들부터 우선 점검해야 한다. 복용합 신관광 사업 발굴 및 육성시스템 구축, 음식관광 상품개발지원, 가족관광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민관공동투자사업 발굴, 관광명장제도, 지역 관광산업 및 지연산업 육성, 지역관광 모니터링 사업추진, 한국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등이 해당되고 있다. 이어 문화관광 축제양성, 충청문화의 체험상품화, 공연관광 상품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의 특화 관광 상품화, 지역관광 매력자원 확충사업, 관광명품사업 지원 확대, 지자체 공동마케팅 확대, 지역관광 수용태세 정비지원, 지역음식과 쇼핑환경 개선사업, 지역 테마관광 상품개발, 지자체 관광문화 국제교류 지원 사업, 통합적 관광안내체계 정비, 관광자원 다국어 콘텐츠 개발지원, 지역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방식제공, 고택·종택을 활용한 한옥 숙박시설 개발확대, 관광 서포터스 육성 등도 준비되어 있다. 한편 문화비전 2030 계획도 있다. 여기에 있어서는 ① 지역 문화 분권의 실현 : 지역문화자치 기반조성,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해당되며 ②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 문화자원과 신기술·지식융합 촉진, 문화자원의 기록·보존 체계 강화, 융합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과 함께 ③ 기타사항 : 국제(아시아)교류확대, 남북교류협력

사업,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 문화공유지 활성화 사업 등이 검토대상이다. 특히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큰 그림을 그려놓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있어 6개 발전전략에 대응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머리 맞대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2010년 충청광역경제권 장기 발전 구상계획과 같은 형태로 연계협력 구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중앙정부 (18부 5처 17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도전도 필요해 보인다. 관광업무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만이 아닌 유관부서의 다양한 생각들도 면밀히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6. 중앙부처의 문화관광 관련사업

부처명	부처 연계사업
문체부 (17)	① 문화적 도시재생, ② 문화특화지역 조성, ③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④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⑤ 마을미술 프로젝트, ⑥인문 활동가 양성·파견, ⑦ 문화영향평가, ⑧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⑨ 관광두레 조성, ⑩ 시티투어 활성화, ⑪ 열린 관광지 조성, ⑫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⑬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⑭ 특화(생태)도서관 육성지원, ⑮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⑯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활성화 지원, 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문화재청 (6)	①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② 문화재분야 전문가 참여, ③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④ 생생 문화재 ⑤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⑥ 고도 역사문화도시 조성
중기부 (9)	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②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③ 특성화시장 육성, ④ 청년상인 육성 ⑤ 상권 활성화, ⑥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⑦ 지식산업센터건립, ⑧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⑨ 소공인 특화지원
환경부 (10)	① 생태휴식공간조성, ② 생태하천복원, ③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④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⑥ 하수도악취개선, ⑦ 좋은 빛 환경조성, ⑧ 취약계층·어르신 활동 공간 환경성질환 예방, ⑨ 도시 고물상 시설개선 지원 ⑩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산림청	① 도시 숲 조성
행안부 (8)	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②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③ 마을기업 육성, ④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⑤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⑥ 공공 유휴 공간 민간 활용 지원 사업 ⑦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사업 ⑧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고용부 (6)	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② 청년 사회적 기업이 육성, ③ 사회적 기업이 아카데미, ④ 사회적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⑤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⑥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운영
농식품부	①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진청	①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산업부 (2)	① 산업단지 환경조성 ②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부처명	부처 연계사업
법무부	① 범죄예방환경 개선
경찰청	①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죄예방 컨설팅
교육부 (3)	① 학교시설 복합화 건축추진, ②대학생 공공·연합기숙사, ③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여가부 (3)	① 청소년시설 확충, ②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③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
복지부 (2)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② 다함께 돌봄
과기부	① 공중선 정비

자료: 국토교통부(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계부처 연계사업 설명자료

4. 차별화 전략: 아래로부터의 접근

일반적으로 지역관광정책의 문제점으로써 하향식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이자 내발적 지역연계 발전전략이 미흡하고 민간참여의 저조와 원조 고집 내지는 모방과 복제 남발, 추진주체의 불분명, 관광정보제공에 대한 한계, 정책일관성 부족, 지자체장의 한정된 경험과 앞선 의욕에 좌우되는 현상 등이라 판단하고 있다. 과거 충청권 광역경제 개발위원회와 현재 충청권행정협의회 또는 최근 시도 연구원이 규합한 세종·충청포럼을 활용하는 방안과 새롭게 가칭「충청권 광역행정본부」, 「충청광역개발공사」, 「충청관광공사」 등을 신설, 이를 관광하게 하거나 한시적으로 「충청문화관광 공동개발단」 등과 같은 T/F 팀을 운영해야 하겠다. 동시에 계획에 대한 성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문화자원의 활용인지 관광(단지)개발인지, 지역개발차원인지 아니면 광역권 종합개발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해당부문의 전문가 참여는 물론, 지역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행·재정적인 절차까지도 지역주민의 의견과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접근모형에 맞게 설명해보자면 먼저 자원개발 측면이다. 현재 활용 가능한 관광자원을 비롯하여 복원과 창출 가능한 매력가치들을 공동으로 정리해보고 기존의 자원과 시설들에 대해선 세밀한 가치평가가 작업이 이뤄졌으면 한다. 인적자원개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동시에 꾸준한 관광종사원 재교육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환대요령들도 질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에서 준비되어야 하겠다. 둘째, 시장개발 측면이다. 여기에는 최우선으로 '국토중심지역'이라는 핵심이미지를 발판 삼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명소마케팅 작업과 지속적인 수요 환기형 축제와 이벤트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충청권 33개 시군이 단일 공동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계절별·소재별·코스별로 상품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마련도 시급하다. 셋째, 정책개발 측면이다. 앞서 강조했던 추진주체(조직)의 구성을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해당 분야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접근체제가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과도한 공공주도를 피하고 산학관연의 네트워크도 절실하다. 동시에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공조지원체제도 중요해 보인다.

VI. 결론

19세기가 자유의 시대였고, 20세기가 평등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행복의 시대라 생각한다. 이는 과거생활의 핵심이 생존과 성장을 위한 치열한 경쟁구조이었다면 이제는 자존과 자유를 위한 개선과 진보 등으로 그 중심점이 이동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근래의 지역정책들도 활력(vitality)과 녹색(green), 재생(regeneration), 문화(culture), 복지(welfare), 참여(participation)라는 이념들로 재구성되어 가고 있다. 그 중 문화정책의 역할과 기능이 큰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해 보인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요소가 사회흐름에 대한 큰 물결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음과 동시에 다양한 지역주민의 수준과 요구에도 쉽게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에 대한 전통성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사회통합은 물론 더 나아가 문화 복지와 산업으로의 확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대도시권 중심으로 몰리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나름대로의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등장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연계협력」을 통한 광역화 전략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충청중부권을 대상으로 비교적 열악한(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접근방향들을 생각해 보았다.

막연하고 산발적인 관광개발이 아니라 최소한 자원부문, 시장부문, 제도부문을 구분 짓고 정책내용도 국민관광과 국제관광, 복지관광, 산업관광 등으로 세분화하여 품질과 품격을 목표로 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 전략을 언급해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공동건의문이나 충청권 공약 발굴, 광역자치단체별 긴급현안에 대한 공동지지 수준 보다는 설립이후 28번(1년에 약 한번 꼴) 개최되었던 시도지사 모임(충청권행정협의회)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만든 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 11개의 내용에 문화관광을 첨가했으면 좋겠다. 동시에 산하의 실무협의회(기획조정실장 중심)라도 더 많이 개최하고 보다 실질적인 연대협력 아이디어를 도출, 추진했으면 한다. 게다가 이미 구

축되어 있는 (사)지역별 관광협회 이외에 관광진흥법(제48조의 9)에 근거한 지역관광협의회부터 연대를 시작했으면 한다.

2019년 9월,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가 설립한「동남권광역관광본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충남이 충남관광재단을 설립 추진 중에 있는데 이참에 중부권에서도 4개 광역자치단체 연합의 (문화)관광 전문기관이 존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시행하면 좋겠다. 다행히도 최근 지역발전사업 정책에 “다 부처 묶음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초)광역적 연대사업의 권유, 그리고 다양한 지역분권과 국토균형화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이제는 실천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2018), 강원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연구.
- 경기도(2018), 경기 남부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연구.
- 고경훈·김건위(2014), <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7), <우리 지역 관광지 TOP 3 : 충청관광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8), <2018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집>
- 김상태 외(2016), <관광과 정부의 역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선기·박승규(2015),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송이 외(2014),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지역연계협력사업 추진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 뉴시스(2006. 12. 10), '충청권 3개 시도, 공조체제 다시 가동'
- 대전광역시(2016. 6. 21), 보도자료: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 상생발전 '맞손'.
- 대전광역시(2017),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
- 대전광역시(2018), <민선 7기 문화체육관광 정책방향>.
- 대전광역시(2019a), <2019 대전 방문의 해, 방향설정 및 기본계획>.
- 대전광역시(2019b), <민선 7기 약속사업 자체평가 결과>.
- 대전일보(2019. 5. 2),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꾀한다.
- 대한민국정부 관계부처합동(2017), 관광진흥기본계획(2018-2022).

- 대한민국정부 관계부처합동(2018),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 대한민국정부(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대한민국정부(2019a),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 대한민국정부(2019b),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 박경열(2018),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9b), '경북·여수·정선·창원, 지역관광발전지수 새롭게 1등급', 2019년 12월 30일 보도자료.
- 박진경·김상민(2016), <지역자치단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세계여행신문(2019.12.19.), '2020년 국내여행 트렌드 REFORM'
- 세종관광산업연구소·(주)컨슈머인사이트(2018),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기초환경분석>.
- 세종특별자치시(2016), <제6차 세종권 관광개발계획>.
- 세종특별자치시(2019.12), <시정3기 공약과제 추진상황>.
- 연합뉴스(1999. 3. 29), '대전충청권 발전협의회 구성'.
- 오 마이 뉴스(2004. 12. 13),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 결성'.
- 윤정원 외(2013), 제4섹터 주도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3호, 317~352.
- 이백진 외(2017),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전략: 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 이원희 외(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초연구 보고서.
- 전북일보(2019. 1. 3), '신문으로 트렌드 읽기'
- 조아라(2018), <OECD 미래관광 메가트렌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 인사이트.
- 지역발전위원회(2018),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최자은 외(2013),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 개건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 춘천시(2013),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개발 연계협력사업>.
- 충북발전연구원 외(2012), <충청권 포도·와인산업 선진화방안>.
- 충청권 광역경제 발전위원회(2010), <충청광역경제권 장기발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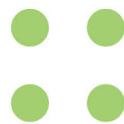
- 충청남도(2017),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 충청남도(2018), <충남(비단강권역)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
- 충청남도(2019), <민선 7기 공약이행현황>.
- 충청남도(2020), <미래 10면, 충남의 전략산업과제>.
- 충청북도(2017),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 충청북도(2019), <민선 7기 공약 세부추진 상황>.
- 한국관광공사(2019a), <2020년 세계여행 트렌드>, KTO 포커스.
- 한국관광공사(2019b), <관광경쟁력진단결과 >, <http://kto.visitkorea.or.kr/kor/biz>
- 해양수산부(2018),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
- 황해란 외(2018), <대도시권 관점의 대전·세종 상생협력 방향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기획 연구 보고서.
- 황해란 외(2019), <대전시 출범 70주년 회고와 전망: 아젠다 및 정책과제 발굴>, 대전세종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서.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중부권 산업경제 협력 방안

● 운영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부권 산업경제 협력 방안



윤영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중부권 산업경제 협력의 대두 배경

1) 왜 중부권 논의가 시작되었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본격화는 박정희 정부 주도로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례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한다.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숱한 질곡을 겪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초고속의 성장을 거두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당시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최빈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가난한 국가였으므로¹⁾ 제한된 자원과 기술력 등 양적 질적 한계로 인해 부득이 하게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입각한 불균형적 성장을 지속해왔다. 산업적으로는 국가가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작하여 산업가치사슬을 구현하고 글로벌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 민간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민간에 이양하는 모형으로 ‘산업의 쌀’로 지칭되는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1960년대 만들어진 포항제철이나, 1970년대 시작된 조선, 1980년대 중화학 그리고 1990년대 IT, 2000년대 BT 등까지 이어져왔다.

그런데 이러한 불균형성장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통한 주변 지역을 성장시킨다는 전략으로 지역적으로는 역할을 할당시켜 왔는데, 기업활동(기획, RnD, 마케팅 등)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담당하고 대규모 생산설

1) 1953년 1인당 소득은 67달러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그 뒤 8년이 지난 1961년에조차 1인당 소득은 82달러로, 179달러였던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비는 영남권과 호남권에 집적시키고 물류는 부산항(2000년대부터는 광양항과 항공물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구현하는 산업적 구조를 견지해왔다. 물론, 이와 연관된 물류체계(철도, 도로망 등) 역시 경부축선과 호남축선상을 타고 발전을 거듭해왔다. 역으로 이 발전축에서 소외된 지역과 이 가운데 위치한 충청권은 오랫동안 낙후지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결국, 60여년간 지속된 불균형성장 정책의 결과 수도권 및 영남권, 호남권의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을 지속시켜왔고, 발전축에서 빚겨난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성장과 경제위축이라는 악순환의 두 틀이 맞물려 왔다.

사실, 이러한 불균형의 폐해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고도성장기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이미 다양한 정책이 전개되어 왔다. 이른바 ‘수도권 규제’ 등과 같은 전략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역대 정부가 범정부차원의 각종 규제정책을 제시하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경제 활성화가 개선되었다는 소식은 접한바 없다.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1980년대 35%에서 2020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외형상으로는 일관되게 견지하여 왔으나, 내심은 수도권 비대화를 방지 또는 내심 옹호하였거나 그렇지 않다면 관련 정책의 실패가 지속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수도권은 BSTO(Bejing, Seoul, Tokyo) 구현을 통해 수도권의 규제 완화 논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영호남권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척되는 대도시권³⁾ 구현을 주장하고 각종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반면, 충청권은 안타깝게도 오랜 역사를 가진 대도시권의 거점이 존재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유로 영호남권과 달리 구체적인 구심점을 갖지 못했고 삼국시대에서 출발한 동질성도 크지 못해왔으나, 최근에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른바 ‘중부권 협력방안’이 개진되기 시작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2) 통계청은 지난해 8월까지지만 해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시점이 2020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 12월 말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 거주인구가 2,592만5,799명으로, 전체 비수도권 거주인구(2,592만4,062명)보다 1,737명 많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추월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대·비수도권 인구 역전은 지방 소멸 우려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 2020.1)

3)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는 ‘크다(megalo)’라는 그리스어와 ‘도시(polis)’의 합성어. 즉, 여러 개의 대도시가 연결된 도시 지역으로 매크로 폴리스의 상위개념. 지리학자 Jean Gottmann이 저서 <<Megalopolis: The Urbanized Northeastern Seaboard of the United States>>(1961)에서 미국 북동부의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등 대도시와 대도시 주변의 도시화된 지역을 메갈로폴리스라고 지칭하면서 유래

2) 중부권의 개념 정의

중부권이란 글자 그대로 분단된 한반도 남쪽인 남한을 대상으로 구분하는 물리적 개념으로 북부권(인천, 경기, 서울, 강원)과 남부권(호남, 영남)의 대별되는 지역이다. 즉, 충청권과 경상북도 북부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북부권에서 경기와 인천을 북부권이라고 사용하지는 않고 우리나라 북부권에 위치한 인천, 경기 등은 북부권이 아니라 수도권이라고 지칭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권역별 구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분화되고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중부권과 남부권, 북부권으로 구분되며, 이를 더 세분하는 통상의 개념으로 영남, 호남, 강원, 충청 등의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가 지칭하는 중부권의 개념은 충청권 즉 대전, 세종, 충북, 충남(지역 호칭 순서는 충청권협의체 호칭순)이라는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통상 지칭되는 중부권에서 경상북도 북부권이 언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중부권의 개념에 물리적인 지역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권의 개념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중부권의 개념은 충청권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부권의 개념이 대두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나, 일견 수도권에 대별되는 개념으로서의 지방 그리고 지방을 구분하는 개념으로서 영남, 호남, 강원과 함께 충청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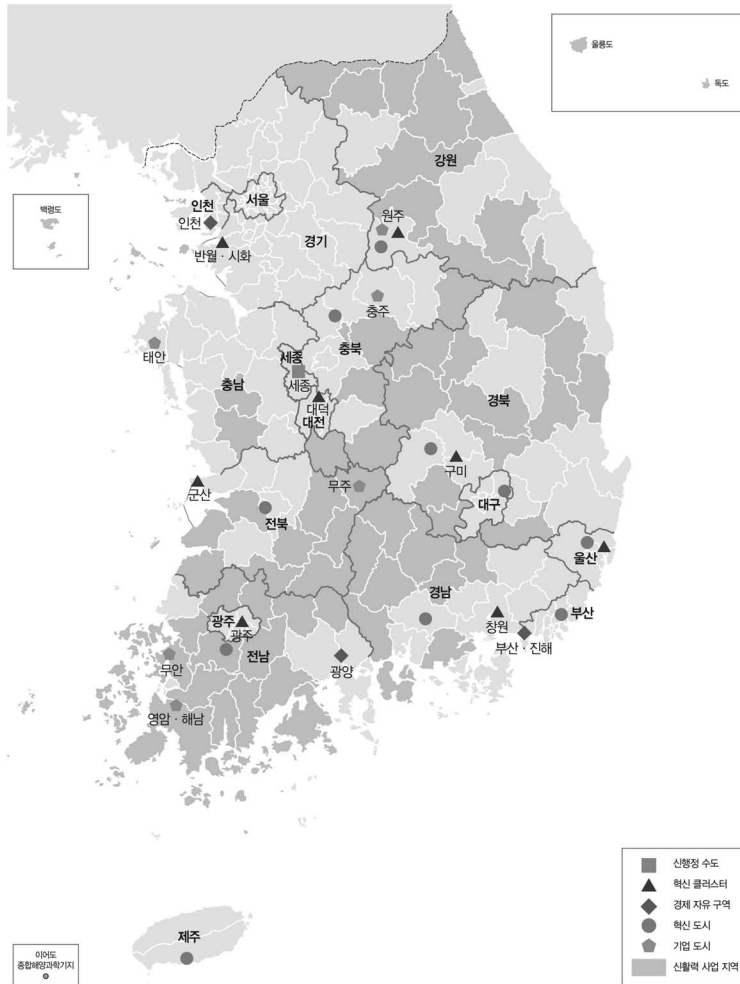
II. 중부권 산업경제 동향

1. 중부권 산업경제 주요 연혁

1)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

지역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설정하고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한 시점은 노무현 정부부터이다. '참여정부'로 지칭되는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이라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 1. 참여 정부 지역 발전 정책



참여 정부에서는 만성화된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문제로의 인식을 토대로, 지역 정책의 목표를 '다핵형·창조형 선진 국가 건설'로 설정하고, 더 나아가 혁신 주도형 발전, 다극 분산형 발전, 공간의 질·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발전 등을 하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참여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혁신 정책, 균형 정책, 산업 정책, 공간 정책, 질적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적 정책 수단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 체계와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설치하였다.

당시 추진되었던 사업의 주요 핵심은 지역혁신특성화사업운영요령(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 진행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산·학·연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시·도별(2이상의 시도간 연계가능)로 전략·지연(地緣)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이 지원대상이며,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다.⁴⁾ 당시 수도권을 제외한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혁신특화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지역	기술 분야	지역	기술분야	지역	기술분야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 •고주파부품 •지능형로봇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스플레이 •영상미디어 •동물자원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장비부품 •전자정보부품 •보건의료 •생물의약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정밀화학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정보 •생물건강 •해양생명환경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식품 •생물농업 •신소재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부품 •기계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 		

2) 이명박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

참여정부의 사업은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지방의 체감도 미흡, 소규모 분산 투자, 유사 중복 사업의 발생 등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2009년 발표한 '5+2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복 투자 논란, 사업간의 연계성 부족 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광역경제권을 주축으로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사업을 행정구역을 초월한 인구 500만정도의 지역을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목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을 7개(5+2) 권역으로 나누며 특화발

4)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전략", <http://www.balance.go.kr>

전을 통한 경쟁력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08.9.10에 30대 선도프로젝트, 선도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제시한 이후 '09하반기에는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충청광역경제권을 충북, 대전, 충남의 3개 시도가 협의체가 구성되었다(이 광역경제권 거버넌스는 박근혜 정부에서 해체시켰음).

각 권역별 선도산업, 프로젝트, 성과목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설정하고 선도산업과 프로젝트를 NEW IT(무선통신, 반도체 등), 의약바이오(신약실용화, 후보물질 등)로 제시하였다.

그림 2.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수도권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강원권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선도산업	지식정보산업		선도산업	의료융합	의료관광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 u-healt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유치 • 의료바이오
			성과목표	해외환자 5,000명 유치 등	
충청권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대경권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 산업의 신성장지대	
선도산업	NEW IT	의약바이오	선도산업	그린에너지	IT융복합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통신 • 반도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약실용화 • 후보물질 등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전지 • 수소연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 로봇
성과목표	수출 30억불, 고용 4,200명		성과목표	수출 7억불, 고용 8,100명	
호남권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		동남권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선도산업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선도산업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 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카 • LED 등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카 • 해양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부품 • 수송부품
성과목표	수출 12억불, 고용 3,000명		성과목표	수출 10억불, 고용 5,000명	
제주권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선도산업	물산업	관광레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생수 • 수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 • 인센티브 투어 			
성과목표	수출 5천만불, 고용 500명				

충청권의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부분인 의약바이오 및 New IT와 관련된 비전, 목표 전략 등은 다음의 표와 같다.⁵⁾

표 2. 충청권 선도산업의 비전과 주요 내용

선도 산업	비전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의약 바이오	의약바이오산업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바이오강국 실현	기업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상 후보물질 개발 및 지원 • 신약제품화 지원 등
		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인허가를 목표로 하는 의약품 개발 • 첨단 의약 바이오 소재 실용화 등
New IT	New-IT산업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용 디스플레이 • 초소형 정보저장 부품 등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감형 반도체 •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장비 등

자료: 지식경제부,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확정” 보도자료, 200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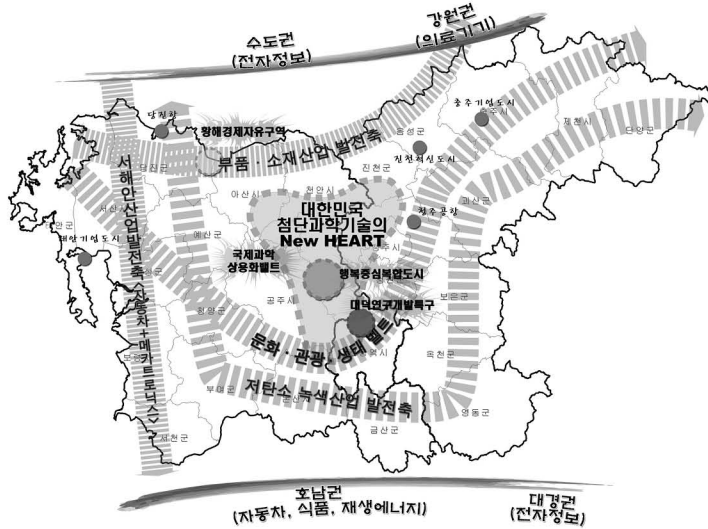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에서 당시 충청권을 대상으로 추진된 공간 배치 구상은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권을 광역네트워크 성장축으로 설정하였다. 대한민국 국토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위상과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새로운 국부창출의 중심지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기조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New HEART」을 상징적인 중심거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거점으로 충청권이 상생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4개의 벨트를 구축하였다. ①신 국부창출의 상징거점을 중심으로 북부축과 남부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부품.소재산업 발전축」과 ②「저탄소 녹색산업 발전축」을 설정하였으며, ③내륙과 해안지역의 산업과 환경.자원을 바탕으로 내륙 「문화.관광.생태」 벨트와 ④서해안 자동차.메카트로닉스 산업을 바탕으로 「서해안산업발전축」을 설정하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충청권의 역량을 집중할 성장거점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①과학기술. 문화.행정의 글로벌 중심도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②미래 원천과학기술과 기술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국제과학상용화 벨트」 조성, ③권역에 잘 갖추어진 IT, BT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의료 글로벌 거점 「첨단의료 임상단지」 조성, ④충청권 신 성장동력 창출원으로 「국방과학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충청권 선도·전략산업 신 융합(New Combination)을 위한 일환으로 ①New IT, 의약바이오 선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②선도-전략산업의 신 융합으로 융복합산업 선도거점, ③기술융합산업시대를 대비한 융합지식 창출과 융합기술인력 양성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5) 국가균형위원회, “2009. 지역특화발전전략”, 2008.

그 외에 충청권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통한 연결성 강화를 추진하였는데, ①광역경제권간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 ②성장거점간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신성장거점의 효과적 조기 육성, ③항만, 공항, 내륙화물 거점 연계로 물류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기타 광역경제권 권역간 연계·협력으로 상생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수도권과의 광역적 연계(자동차·부품, 전자정보 산업), 강원권과의 광역적 연계(의료기기, 전자정보), 호남권과의 광역적 연계(자동차·부품, 식품, 신재생에너지), 대경권과의 광역적 연계(전자정보)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 충청 광역경제권 발전축 구상



2. 최근 충청권 지자체 산업 정책

현재 각 지자체별 산업정책은 매년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이 되어 각 지자체별로 설립된 테크노파크 등의 기관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을⁶⁾ 추진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충청권 각 지자체별 계획 비전 및 주요 특화산업은 다음과 같다.⁷⁾

6) 각 지자체별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발췌 기재하였음

7) 각 지자체별 순서는 통상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순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순서대로 기재하였음

(1) 대전

대전광역시의 비전은 “기술융합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며, 주력산업 전략분야는 ①무선통신 융합산업: 스마트부품, 스마트기기, 무선네트워크, 무선플랫폼 서비스, 빅데이터 서비스, ②로봇지능화산업: 지능형SW모듈, 자동화 HW모듈, 지능형이동시스템, 콘텐츠 서비스, ③바이오기능성 소재산업: 의약 및 산업용 소재, 기능성향장소재, 건강기능식품소재, 고감성 기능성 생활소재 등이다.

(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 2019년도 비전은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며, 특화산업은 ①첨단수송기기부품: 미래자동차 ICT융·복합 첨단수송기기부품 거점 조성과 ②정밀의료산업: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최적화된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구현이다.

(3) 충북

2019년 충북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충북의 비전은 “충북 주력산업 고도화 및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주요 전략산업은 ①스마트 IT 부품: 지능 사회 촉진을 위한 스마트 IT부품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②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산업의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및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③수송기계소재부품: 친환경 및 지능형 핵심원천기술 확보로 충북지역 수송기계 소재부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대내·외 경쟁력 강화 등이다.

(4) 충남

충남의 지역전략산업 관련 비전은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 지역경제 실현”이며, 주요 전략산업은 ①차세대 디스플레이: 융복합 디스플레이, OLED 부품·모듈,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 ②친환경 자동차부품: 지능형 전장부품, 경량화 소재부품, 고효율 동력전달부품 등, ③바이오 식품: 기능성 소재, 건강기능식품, 융복합 바이오식품 등이다.

(5) 시사점

현재 충청권 지역전략산업은 각 지자체별 특징점을 반영하여 3개 산업(단, 세종시는 2개산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IT, BT 등 첨단산업군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IT 부문의 편중성이 높고 IT와 기계부품 산업이 접목된 분야로 특화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산업 가운데 BT는 소재, 의료, 헬스, 식품산업군으로 그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며, IT의 경우에도 ICT, 부품, 디스플레이 등으로 범주도 매우 넓은 편이다. BT와 달리 IT는 지역에 소재한 클러스터 허브(R&D, 대기업 등)를 주축으로 융복합산업군으로 편재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표 3. 충청권 지역전략산업 현황

지역	전략 산업	비고	지역	전략산업	비고
대전	- 무선통신 융합산업	IT	세종	- 첨단수송기기부품	IT(기계)
	- 로봇지능화산업	IT(기계)		- 정밀의료산업	BT
	- 바이오기능성 소재산업	BT			
충북	- 스마트 IT부품	IT	충남	- 차세대 디스플레이	IT
	- 바이오 헬스	BT		- 친환경 자동차 부품	IT(기계)
	- 수송기계 소재 부품	IT(기계)		- 바이오 식품	BT

자료: 충청권 각 지자체 2019년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2019년)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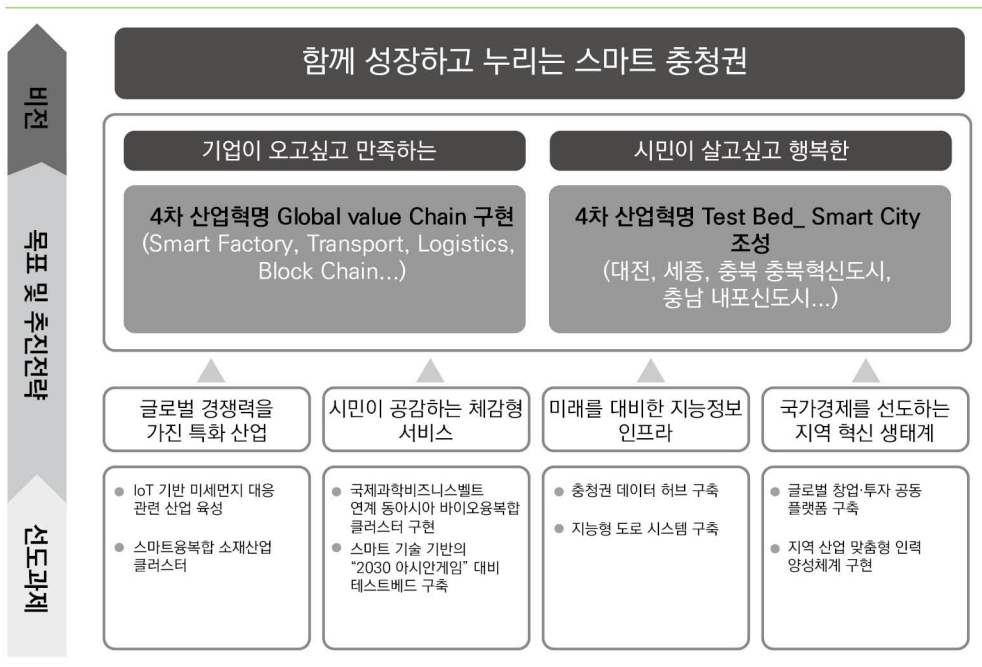
III. 중부권 산업경제 협력을 위한 제언

1. 충청권 협력 연계방안: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검토

현재 중부권 산업경제 협력방안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된 경험은 많지 않다. 다만, 2015년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라는 범충청권 협력 거버넌스가 구현된 이후 매년 충청권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일환으로 매년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왔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교통, 환경 등의 분야가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2019년에는 충청권 광역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허브 구현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된바 있다.⁸⁾

8) 충청권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용역의 자세한 내용은 충청상생협력기획단(2019), 「충청권 4차 산업혁명 허브구축방안」을 참고 바람

그림 4. 충청권 4차 산업혁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출처: 윤영한 외(2019), 「충청권 4차 산업혁명 허브구축방안」, 충청상생협력기획단

이 연구는 비록 4차 산업혁명이라는 틀 속에서 제반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산업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 도입을 계기로 전면적인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충청권의 협력 연계방안 도출의 필요성에 의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각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4개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된 내용이므로 본 연구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충청권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 제고'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①기존 산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②신산업 및 서비스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충청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산업, 서비스의 2단계 접근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①산업 측면: 기업이 오고 싶고 만족하는 “4차 산업혁명 Global Value Chain 구현” 즉, Global Value Chain: Smart Factory, e-Transportation, e-Logistics, Block Chain... 등을 추진하는 한편, ②서비스 측면: 시민들이 살고 싶고 행복한 “4차 산업혁명 Test Bed_ Smart City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Smart City를 신도시형(세종, 충북혁신도시, 내포 등)과 기존도시형(대전, 충북, 충남 시도 등)의 2가지 유형별 접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토된 산업 특화 방향은 크게 3가지 분야로서 ①기존 지역 전통산업 접근: 농수산업(smart farm)과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화 방안 검토하고, ②기존 지역 거점산업 및 전략 산업 중심형 고도화 방안: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스마트 산단화 방안, ③스타트업 및 공유경제 결합형 서비스 산업 생태계 융합 분야: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등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충청권 4차 산업혁명 허브 구축을 위한 과제

연번	과제	비고
(산업분야1) 미세먼지		
1-1-1	IoT 기반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산업 육성	선도과제
(산업분야2) 소재부품		
1-2-1	스마트융복합 소재산업 클러스터	선도과제
1-2-2	수송기계소재 부품산업 첨단 제조경쟁력 확보	
1-2-3	차세대 통신(5G) 기반 초연결 융복합 부품산업 육성	
1-2-4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	
1-2-5	미래핵심소재산업 융합플랫폼 구축	
1-2-6	첨단화학 기술지원센터 구축	
(산업분야3) 미래차		
1-3-1	충청특화형 미래차 플라자 연구센터 구축	
1-3-2	자동차 전장부품 고안전 플랫폼 구축사업	
1-3-3	자율주행차 서비스신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구축	
1-3-4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기반 전장부품소재 기반구축사업	
1-3-5	추출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도시 구현	
1-3-6	수요기반 드론산업 육성	
(산업분야4) 스마트 팩토리		
1-4-1	수요기반 로봇개발 및 보급	
1-4-2	첨단지능형 정밀농업 구현	
1-4-3	제조현장의 디지털혁신(스마트 팩토리) 가속화	
1-4-4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기반 구축	
(산업분야5) 지역전략산업		
1-5-1	유전자 의약산업 특화 육성 추진	
1-5-2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사업	
(서비스분야1) 바이오		
2-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동아시아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 구현	선도과제
2-1-2	개인건강정보 축적, 병원 간편 예약 서비스,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AI 스마트 문진	
2-1-3	개인용 의료기기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개인 유전체 기반 정밀의료 구현	
(서비스분야2) 관광		
2-2-1	스마트 기술 기반의 "2030 아시안 게임" 대비 테스트 베드 구축	선도과제
2-2-2	백제역사유적지구 AR, VR 재현	

연번	과제	비고
(서비스분야3) 안전		
2-3-1	긴급호송 교통 최적화	
2-3-2	드론 활용 응급키트 발송, 재난 현장 생중계	
2-3-3	지방 하천 배수문(통문) 관리 자동화 사업, 지하수 관리 시스템 구축	
(서비스분야4) e-쇼핑		
2-4-1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상품추천, 지역화폐결제시스템, 스마트물품보관, 음식쓰레기 자원화	
2-4-2	농식품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활성화	
2-4-3	에듀테크, 온라인 교육환경 제공	
(서비스분야5) 교통		
2-5-1	공유경제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구현	
2-5-2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및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인프라 분야1) 데이터		
3-1-1	충청권 데이터 허브 구축	선도과제
3-1-2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및 개별건축물 BIM 구축	
3-1-3	IoT망 구축	
(인프라 분야2) 스마트 교통		
3-2-1	지능형 도로 시스템 구축	선도과제
3-2-2	C-ITS스마트 도로 구축	
3-2-3	3차원 도로정밀지도 구축 및 활용	
3-2-4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플랫폼 실증연구	
(인프라 분야3) 4차 산업혁명		
3-3-1	4차 산업혁명 국제박람회 개최	
3-3-2	미래기술융합센터 설립	
3-3-3	블록체인 지역 거점센터 구축	
(인프라 분야4) 기타		
3-4-1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3-4-2	도시혁신 플랫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3-4-3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3-4-4	4차 산업혁명 분야 기능경기대회 개최	
3-4-5	이차전지 자원순환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분야1) 창업 및 투자유치		
4-1-1	글로벌 창업·투자 공동 플랫폼 구축	선도과제
4-1-2	인공지능-바이오 융합 혁신 생태계 조성	
4-1-3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생태계 분야2) 전문인력 양성		
4-2-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선도과제
(생태계 분야3) 산학연 네트워크		
4-3-1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구축	
4-3-2	충청권 테크노파크 협력체계 구현	

* 주: 선도사업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제 가운데 시급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된 사업임
출처: 윤영한 외(2019), 「충청권 4차 산업혁명 허브구축방안」, 충청상생협력기획단

상기에서 제시된 사업 가운데 선도과제를 중심으로 시도별로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을 모색해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충청권의 가장 취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특히, 신성장동력 분야 창업생태계)의 관점에서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새로이 부상하는 산업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의 중핵 허브지대로 중부권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기 추진중인 사업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메갈로폴리스 개념의 4차 산업 중핵지대로의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충청권 산업 서플라이 체인 구현: R&D(대전), 인허가(세종), 생산(충북, 충남), 해외 수출(충남, 충북)

현재 중부권은 타 지역과 다른 차별화된 인프라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GVC(Global Value Chain) 즉,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충청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ISBB: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등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R&D가 집적된 지역인 동시에 IT, BT 등의 산업시설이 집적된 지역이며, 공항과 항만에 이르는 가치사슬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R&D(대전), 인허가(세종), 생산(충북, 충남), 해외수출(충남, 충북)의 역할 분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이미 지난 1970년대부터 국내 최대의 R&D 거점으로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억명 미만 국가로서⁹⁾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 분업(창업 생태계 조성) →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방식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관계로 신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대덕연구개발 특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신산업의 상용화를 위해 요구되는 단계별 인허가는 필연적으로 산업 부 등의 정부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세종시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바이오 분야에서의 충북 오송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제 제품이 생산되는 생산지역으로서 충북과 충남에 산재한 다수의 첨단 산업단지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 산업 패러다임은 국내로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생산과 글로벌 판매라는 국제분업체계(international division)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외 물류창

9) 1억 내수론으로 대체로 인구가 1억 명은 넘어야 내수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중앙일보, "[CoverStory]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지평도를 바꾼다. '행복한고령화시대' 위한 체계적 정책 필요', '16.1.22)

구가 중요한데 국제 컨테이너 항만으로 부상하고 있는 당진항과 함께 최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항공물류의 창구로서 청주국제공항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류와 관련하여 최근 세종시와 연계되는 다양한 물류망이 구현되고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병행하여 충청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 IT, BT 산업 분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시도별로 산재된 글로벌 가치사슬(G-SCM)의 통합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한편, 신산업의 Test Bed로서 충청권의 특화된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병행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비한 맞춤형의 분야별 Test Bed 구축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중부권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현

현실적으로 중부권 산업경제 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가 중부권 지자체 중심의 산업경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충청권 지자체들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로서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이 세종시에 상설된 조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조금 느슨한 거버넌스로서 충청권 추진자문단 구성을 제안한다. 이 조직은 충청권 행정협의회 소속 시장·도지사 등을 협의회장단으로 구성, 충청권 시도 국회의원 등을 고문단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림 5. 충청권 4차 산업혁명 추진 조직 구성(안)



충청권 산업경제협력 추진협의회는 범시·도민추진협의회, 실무추진단, 행정지원단을 위축하여 운영하고 범시·도민추진협의회는 충청권 공감대 확산 및 사업계획 자문, 시·도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결집의 구심적 역할, 충청권 4개 시도간 민간부문 협력강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행정지원단은 충청권 4개 시도간 협력체계 구축, 정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건의활동 전개 및 충청권 세부사업 추진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실무적으로는 간사 지자체에서 실무·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실무추진단은 시도 연구원 및 주요 시민단체 등 관계자로 구성하여 충청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충청권 국가계획 반영 논리 개발, 시도 연계협력사업 발굴 공동연구 등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를 제안한다.

한편, 역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한 사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부권 관련 산업경제 협력 거버넌스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데,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의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은 각 지자체별 행정협의를 통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조례 등을 통한 예산 배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일 필요하다면 광역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입법 건의 병행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IV. 중부권 산업경제 협력을 위한 제언

첫째, 왜 중부권 산업경제 협력이 필요한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왜 중부권 차원의 산업경제 협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가장 첫 번째 논거는 산업경제 패러다임이 특정 광역지자체로 국한되지 않고 인구 300~500만의 매갈로 폴리스를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광주, 대구, 부산 등의 매갈로 폴리스에 버금가는 중부권 매갈로 폴리스 구현이 매우 필요하다. 흥미롭게도 중부권은 타 지역에 비교해 거대도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전 세종과 함께 천안, 내포, 청주, 충주, 충북혁신도시 등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느슨한 형태의 매갈로 폴리스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매갈로 폴리스 형성이 늦어질 경우 수도권의 연담화로 인해 중부권 경제의 수도권 종속 정도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중부권 경제의 자생력도 더욱 약화될 것은 분명하므로 중부권 산업경제 협력을 더욱 서둘러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

또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가 도시화 현상이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 점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¹⁰⁾ 이는 외견상으로 보

10) 매일경제(2018.5.17.), "30년뒤 세계 도시화율 70%"

여지는 각종 편리성 등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 이른바 혁신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것에 기인한다. 뉴욕, 런던 등이 살인적인 물가와 만성화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도시로서 글로벌 리더기업들이 들어찬 이유는 바로 혁신성에 기반하고 있는 혁신 생태계가 자리잡고 있는 탓이다.

둘째,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미 중부권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경제 육성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높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관련 정책이 보다 높은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세심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인적자원 문제이다. 중부권은 최근 IT, BT,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면서 상당수의 매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배출하고 있는 고급 전문인력의 역외유출은 매우 높은 수준인데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 역내에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충청권 지역 내에 머무르고 창업하고 성장하는 이른바 4차산업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이 우수 인력의 양성과 역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계 고교와 분야별 대학원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첨단업종 중심의 창업 생태계 육성과 함께 우수 스타트업 기업을 역내에 정착시키는데 최우선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주창한 Klaus Schwab 조차도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로 우리가 꺾어야 할 변화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정의 할 수 없다”고 언급한바 있다.¹¹⁾ 다만, 분명한 점은 이러한 급격한 패러다임 진행이 폭풍 전야와 같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최근의 변화된 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중부권 각 지자체들도 관련 정책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강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글로벌 수준의 첨단 전문인력을 역내에서 육성하고 이들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선순환 되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한다.

11) 경향비즈(2016, 1. 20), “[경제Talk] 다보스포럼, 제4차 산업혁명을 논하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200957091#csidxf1db062612e377ab2e20ba9fdb93366

셋째, 개방성을 전제로 한 충청권의 개념 정립

마지막으로 중부권의 개념을 충청권으로 국한시키기 보다는 경북 북부권 나아가 동북아 허브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까지 포괄하는 형태로의 확대전략도 적극 강구하는 보다 확장되고 개방적인 정책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보다 전향적이고 포용성을 가진 중부권의 개념이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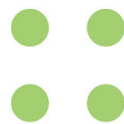
- 경향비즈(2016. 1. 20), “[경제Talk] 다보스포럼, 제4차 산업혁명을 논하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200957091#csidxf1db062612e377ab2e20ba9fdb93366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자료
- 국가균형위원회(2008), “2009, 지역특화발전전략”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2017. 11),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2018. 5),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 추진상황 점검”
- 매일경제(2018.5.17.), “30년뒤 세계 도시화율 70%”
- 미래창조과학부(2015. 3),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 미래창조과학부(2016. 8),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2016. 4),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3.0 전략”
- 장윤중(2016. 6), “4차 산업혁명과 한국산업의 과제”, 산업연구원
- 장재홍, 2009,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의의와 과제”, 산업연구원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1), “주요 선진국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동향”
- 중앙일보, “[Cover Story]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 지형도를 바꾼다, ‘행복한 고령화 시대’ 위한 체계적 정책 필요”, '16.1.22
- 정초시(2018.12), “강호축의 사회경제적 함의”, 「이슈앤 트렌드」, 충북연구원
- 지식경제부, “5+2 광역경제권 산도산업 프로젝트 확정”보도자료, 2009. 5.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전략”, <http://www.balance.go.kr>
-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2019), 「충청권 4차 산업혁명 허브 구축방안」
- 클라우드 슈밥 저/송경진 역(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2015. 9),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2016. 6), “제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 및 시사점”
- 한국표준협회(2015. 7), “스마트공장의 글로벌 추진동향과 한국의 표준화 대응전략”
- 홍성호 외(2018), 「강호축 종합발전계획」,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황혜린(2018),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추진방향성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중부권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

● 이 범 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부권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아우르는 중부권(충청권)은 세종시 출범(2012년)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교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중부권 인구는 약 553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래 인구도 2040년 599만명(통계청)으로 약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기간 전국 인구는 4,734만명에서 5,086만명으로 약 1% 감소되는 것과 비교하면 중부권의 위상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 세종, 청주와 공주 등 인접 도시들은 도시 간 거리가 가깝고 교류가 많아 향후 400만명의 거대 도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본 고에서는 중부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구축되어야 할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부권의 현재 교통시설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추가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도로망, 철도망, 공항, 항만 시설 및 광역 연계교통망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중부권 교통현황

1. 인구 및 인구구조

중부권 인구는 2018년 현재 5,530천명으로 전국 인구 중 11.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전국 인구가 연평균 0.50% 감소한데 반해 중부권 인구는 연평균 0.82% 증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령층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30세 미만의 유소년층 및 청년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중부권 인구 변화

(단위 : 천 명)

구분	1999년	200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대전시	1,364	1,476	1,490	0.49%
세종시	81	80	314	7.82%
충청북도	1,492	1,507	1,599	0.39%
충청남도	1,838	1,916	2,126	0.81%
합 계	4,775	4,978	5,530	0.82%
전 국	51,826	49,269	47,336	-0.50%

주 : 외국인 제외 인구

1999년, 2007년 충청남도 인구는 연기군(세종시)인구 불포함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1992~2010)」, 재정리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 재정리

표 2. 중부권 인구구조 변화

(단위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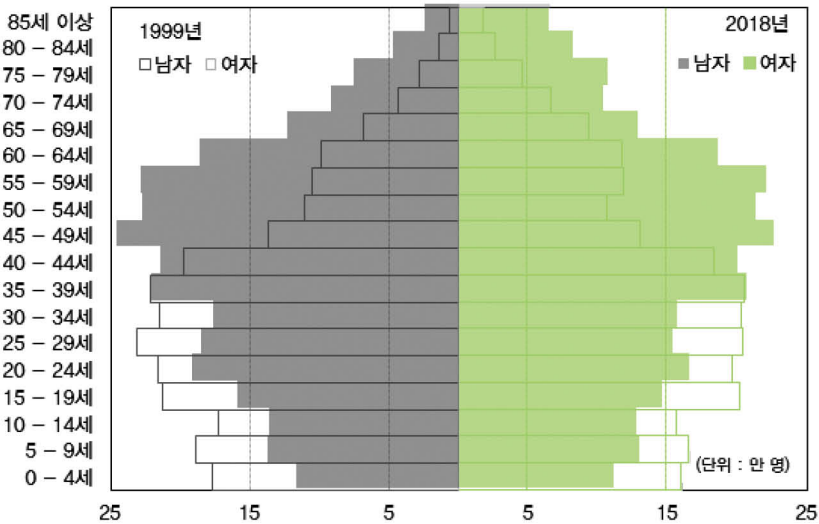
구분		1999년(A)	2007년(B)	2018년(C)	차이(D=C-A)	연평균 증가율
유소년층 14세 이하	인구수	102.1	92.4	76.0	-26.1	-1.63%
	인구 비율	21.0%	18.3%	13.7%	-7.3%	-
청년층 15-29세	인구수	126.4	107.0	100.4	-26.0	-1.27%
	인구 비율	26.0%	21.2%	18.1%	-7.9%	-
장년층 30-64세	인구수	215.6	246.5	291.4	75.8	1.69%
	인구 비율	44.4%	48.7%	52.7%	8.3%	-
노년층 65세 이상	인구수	41.5	59.8	85.2	43.7	4.08%
	인구 비율	8.5%	11.8%	15.4%	6.9%	-
합 계		485.6	505.8	553.0	67.4	0.72%

주 : 외국인 제외 인구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1992~2010)」, 재정리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 재정리

그림 1. 중부권 인구구조 변화



2. 통행량 현황

중부권 전체 수단통행량은 16,102천통행으로 승용차 통행량이 42.6%로 가장 많으며, 버스 12.4%, 철도 1.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내부 통행을 제외한 지역간 통행량은 859천 통행으로 전체 통행량 중 5.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2018년 중부권 수단별 총 통행발생량

(단위 : 통행/일, %)

구분	도보/자전거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기타	합계	
대전시	통행량	1,517,168	1,971,367	650,718	139,953	271,025	58,715	4,608,946
	비율	32.9	42.8	14.1	3.0	5.9	1.3	100.0
세종시	통행량	285,174	362,113	81,082	10,127	24,467	12,481	775,444
	비율	36.8	46.7	10.5	1.3	3.2	1.5	100.0
충청북도	통행량	1,555,648	1,870,828	499,106	15,618	365,525	139,524	4,446,249
	비율	35.0	42.1	11.2	0.4	8.2	3.1	100.0
충청남도	통행량	2,112,594	2,648,030	764,520	71,453	458,289	216,785	6,271,671
	비율	33.7	42.2	12.2	1.1	7.3	3.5	100.0
합계	통행량	5,470,584	6,852,338	1,995,426	237,151	1,119,306	427,505	16,102,310
	비율	34.0	42.6	12.4	1.5	6.9	2.6	100.0

표 4. 2018년 중부권 수단별 지역간 통행량

(단위 : 통행/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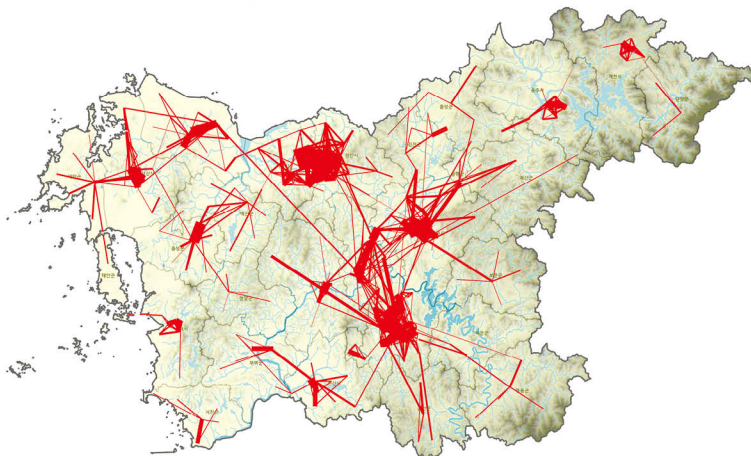
구분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기타	도보/자전거	합계
대전 ↔ 세종	통행량	154,803	16,145	3,229	119	680	0	174,976
	비율	88.5	9.2	1.8	0.1	0.4	0.0	100.0
대전 ↔ 충북	통행량	161,061	16,124	5,696	493	601	31	184,006
	비율	87.5	8.8	3.1	0.3	0.3	0.0	100.0
대전 ↔ 충남	통행량	209,412	25,104	7,498	2,134	5,685	0	249,833
	비율	83.8	10.0	3.0	0.9	2.3	0.0	100.0
세종 ↔ 충북	통행량	70,401	13,226	761	9,355	633	6	94,382
	비율	74.6	14.0	0.8	9.9	0.7	0.0	100.0
세종 ↔ 충남	통행량	73,451	6,154	1,466	300	18	10	81,399
	비율	90.2	7.6	1.8	0.4	0.0	0.0	100.0
충북 ↔ 충남	통행량	62,158	9,408	1,105	578	1,015	276	74,540
	비율	83.4	12.6	1.5	0.8	1.4	0.4	100.0
합계	통행량	731,286	86,161	19,755	12,979	8,632	323	859,136
	비율	85.1	10.0	2.3	1.5	1.0	0.0	100.0

주 : 광역교통량은 주도시인 대전시와 주변도시 간 양방향 통행량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2018년」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O/D 보완갱신, 대전광역권 PA목적 OD 재작성

도시간 통행량을 보면 대전-세종, 세종-청주, 천안-세종, 천안-홍성 등의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 중부권 2018년 통행량 분포도



3. 교통시설 현황

1) 도로 현황

중부권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 있으며, 총 연장은 총 15,645km이다. 이 중 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하는 고속도로는 12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표 5. 중부권 도로유형별 연장(2018)

(단위 : m)

구분	전체	고속국도	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대전시	2,140,388	76,140	83,887	499,995	30,446	-	-	1,449,920
세종시	402,441	18,530	70,961	-	25,450	287,500	-	-
충청북도	5,942,571	388,406	972,058	-	1,437,493	1,550,057	2,594,557	-
충청남도	7,159,852	429,990	1,279,124	-	1,692,174	2,580,670	1,177,894	-
합계	15,645,252	913,066	2,406,030	499,995	3,185,563	4,418,227	3,772,451	1,449,920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로현황조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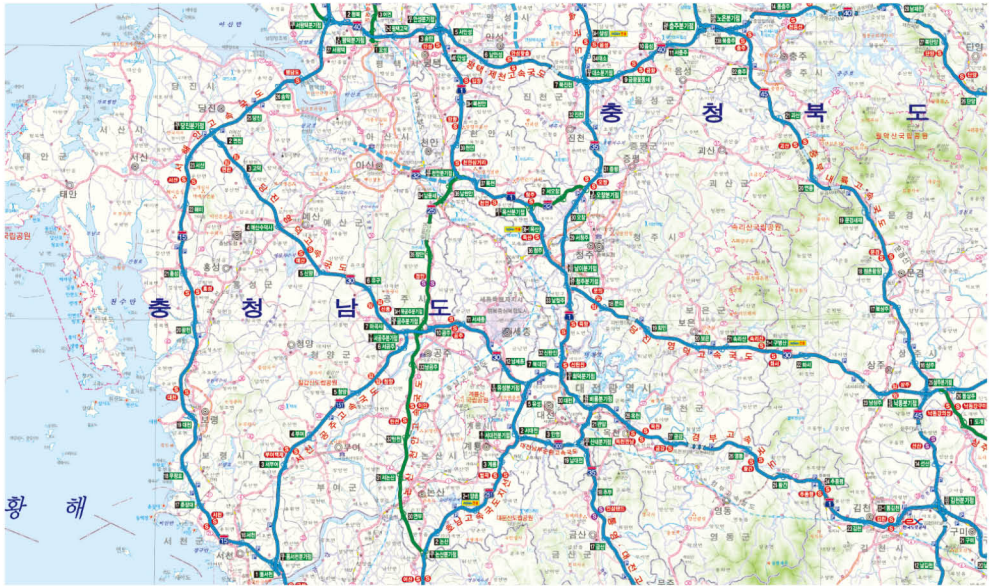
표 6. 중부권 고속도로 현황

(단위 : 대/일)

구분	노선	구간	차로수	합계	승용차	버스	화물
대전시	경부	회덕-남이	8	115,037	76,397	3,965	13,663
	당진영덕	서공주-유성	4	38,500	29,274	533	3,600
	통영대전	장수-산내	4	37,136	28,770	1,271	3,236
	호남지선	서대전-회덕	4	67,875	47,552	1,511	7,897
	대전남부순환	서대전-산내	4	36,558	27,360	515	3,920
세종시	당진영덕	서공주-유성	4	34,350	18,915	815	5,789
충청북도	경부	회덕-남이	8	129,731	82,969	4,972	16,531
	당진영덕	청주-낙동	4	41,718	23,696	1,135	6,681
	중부	남이-오창	4	68,454	45,812	1,848	8,762
	평택제천	대소-충주	4	32,568	20,021	524	4,776
	중부내륙	낙동-충주	4	46,638	28,637	1,484	6,003
	중앙	제천-만종	4	24,297	18,459	988	2,111
충청남도	경부	옥산-천안	6~8	84,345	39,948	4,319	12,167
	서해안	동서천-당진	4	33,457	23,325	783	3,689
	논산천안	논산-천안	4	49,916	33,366	3,197	5,240
	당진영덕	당진-서공주	4	23,496	14,962	439	3,141
	중부	장수-산내	4	29,658	20,888	1,633	3,045
	서천공주	동서천-서공주	4	16,250	10,865	704	1,943
	호남지선	논산-서대전	4	45,617	29,910	1,132	6,128

자료: 국토교통부(2019), 2018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그림 3. 중부권 고속도로 노선도



2) 철도 현황

중부권 철도노선은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등 고속철도 2개 노선과 경부선, 호남선 등 일반철도 4개 노선이 있다. 중부권 전체 여객수송량은 63,546천명이며, 화물수송량은 9,374천톤이다. 여객수송은 대전이 가장 많고, 화물수송은 충북이 가장 많은 실정이다. 역별 수송객수는 대전역, 천안아산역, 오송역, 천안역, 서대전역, 조치원역 순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표 7. 중부권 철도 현황

노선	구간	연장(km)	주요역
경부고속철도	서울~부산	398.2	대전(대전역), 충북(오송역)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183.8	충북(오송역), 충남(공주역)
경부선철도	서울~부산	441.7	대전(대전역), 세종(조치원역) 충북(오송역), 충남(천안역)
장항선철도	천안~익산	154.4	충남(천안역~장항역)
호남선철도	대전조차장~목포	252.5	대전(서대전역), 충남(논산역)
충북선철도	조치원~봉양	115.0	세종(조치원역), 충북(오송역)
합계	9개 노선	1,654.0	

자료: 국토교통부(2019), 2018 철도통계연보

표 8. 중부권 철도 수송 현황

(단위 : 명, 톤)

구분	여객			화물		
	승차인원	하차인원	합계	발송톤수	도착톤수	합계
대전시	12,070,430	12,004,471	24,074,901	160,721	1,121,338	1,282,059
세종시	1,751,156	1,766,773	3,517,929	40,063	3,476	43,539
충청북도	6,495,534	6,408,360	12,903,894	598,872	3,294,175	3,893,047
충청남도	11,505,130	11,543,961	23,049,091	1,855,796	1,497,815	3,353,611
합계	31,822,250	31,723,565	63,545,815	2,647,570	6,726,111	9,373,681

자료: 국토교통부(2019), 2018 철도통계연보
지리지, 2018 통계연보

그림 4. 중부권 철도 노선도



3) 공항 및 항만 현황

중부권 공항은 청주공항 1개가 있으며, 청주공항은 2017년 기준 연간 15천회를 운항하고 있고, 연간 257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중부권에는 5개의 무역항과 2개의 연안항이 있으며,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은 국가(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태안항, 보령항, 대천항, 비인항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중 평택·당진항이 가장 많은 하역능력을 갖고 있다.

그림 5. 중부권 공항 및 항만시설 위치도



표 9. 청주공항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시설현황	소재지	충북 청원군 내수읍 오창대로 980
	부지(㎡)	1,909,645
	활주로(m)	2,744×60, 2,744×45
	계류장(㎡)	91,047
	여객터미널(㎡)	24,282(국내 8,000 / 국제 16,282)
	주차장(㎡)	106,306
	화물터미널(㎡)	2,257(국내 1,620 / 국제 637)
처리능력	운항횟수(년)	140,000(민항 60,000)
	동시주기(대)	18(일반 10/ 소형 8)
	여객(만명)	341(국내 189 / 국제 152)
	동시주차(대)	3,523
	화물(만톤)	3.8(국내 3.3 / 국제 0.5)

자료: 국토교통통계누리, 국내항공시설현황

표 10. 청주공항 연도별 여객수 및 화물 수송량

(단위: 명, 톤,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여객	국내선	1,165,030	1,163,405	1,235,680	1,610,861	2,118,695	2,385,611	15.4%
	국제선	143,964	215,199	466,688	507,631	614,060	185,940	5.3%
	합계	1,308,994	1,378,604	1,702,538	2,118,492	2,732,755	2,571,551	14.5%
화물	국내선	11,175	10,641	12,540	13,806	14,927	16,721	8.4%
	국제선	5,249	2,353	5,217	5,996	7,336	2,492	-13.8%
	합계	16,425	12,994	17,757	19,802	22,263	19,213	3.2%

자료: 청주시, 2018 통계연보(2017년 기준)

표 11. 중부권 항만시설 현황

구분	위치	지정일자	항만구역(km ²)		선석수	하역능력	비고
			해상	육상			
평택·당진항	당진시 석문면, 송악읍	1086. 12.	94,254	6,350	63(31)	8,524 만톤(R/T)/년	무역항 (국가관리)
대산항	서산시 대산읍	1991. 10.	69,343	365	31	1,351 만톤(R/T)/년	무역항 (국가관리)
장항항	서천군 장항읍	1968. 01.	4,898	171	2	148 만톤(R/T)/년	무역항 (국가관리)
태안항	태안군 원북면	1998. 02.	8,245	-	3	1,794 만톤(R/T)/년	무역항 (충남관리)
보령항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1983. 08.	34,679	9	4	1,801만톤(R/T)/년	무역항 (충남관리)
대전항	보령시 신흥동	1970. 07.	21,825	337	2	4 만톤/년	연안항
비인항	서천군 서면	1970. 07.	1,627	122	1	2 만톤/년	연안항
전체			234,871	7,354	106(74)		

주 : ()는 평택·당진항에서 당진항을 구분한 것임
 자료: 충청남도(2018), 제2차 충청남도 지역물류기본계획(2017-2026)

III. 중부권 장래 교통전망

1. 인구

중부권 인구는 2018년 현재 5,621천명(외국인 포함)에서 2040년 5,985천명으로 364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동기간 전국 인구는 51,607천명에서 50,855천명으로 752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중부권의 인구는 크게 성장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표 12 중부권 장래 인구 전망

(단위 : 천 명, %)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연평균 증가율
대전시	1,500	1,462	1,438	1,415	1,386	-0.39%
세종시	349	425	484	531	564	2.43%
충청북도	1,632	1,653	1,674	1,685	1,678	0.14%
충청남도	2,204	2,268	2,320	2,352	2,357	0.34%
합계	5,685	5,808	5,916	5,983	5,985	0.26%

주 : 외국인 포함 인구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2. 통행량

중부권 통행량은 2018년 16,102천통행에서 2040년 17,188천통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동기간 지역간 통행량은 851천통행에서 1,310천통행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13. 2040년 중부권 수단별 총 통행발생량

(단위 : 통행/일, %)

구분	도보/자전거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기타	합계	
대전시	통행량	1,441,917	2,099,464	640,205	141,478	256,746	56,790	4,636,600
	비율	31.1	45.3	13.8	3.1	5.5	1.2	100.0
세종시	통행량	305,926	633,819	196,742	17,762	35,437	18,180	1,207,866
	비율	25.3	52.5	16.3	1.5	2.9	1.5	100.0
충청북도	통행량	1,549,141	1,999,829	546,423	28,912	380,470	136,689	4,641,464
	비율	33.4	43.1	11.8	0.6	8.2	2.9	100.0
충청남도	통행량	2,184,811	2,905,331	838,521	100,837	452,807	219,467	6,701,774
	비율	32.6	43.4	12.5	1.5	6.8	3.2	100.0
합계	통행량	5,481,795	7,638,443	2,221,891	288,989	1,125,460	431,126	17,187,704
	비율	31.9	44.4	12.9	1.7	6.5	2.6	100.0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2018년「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전국 여객O/D 보완갱신」, 대전광역시 PA목적 OD 재작성

표 14. 2040년 중부권 수단별 지역간 통행량

(단위 : 통행/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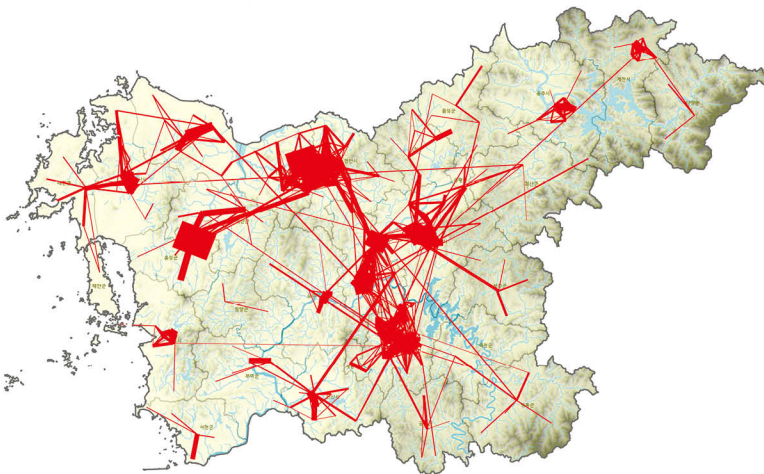
구분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기타	도보/자전거	합계
대전 ↔ 세종	통행량	183,487	12,756	5,662	300	1,787	0	203,992
	비율	89.9	6.3	2.8	0.1	0.9	0.0	100.0
대전 ↔ 충북	통행량	194,334	24,898	9,199	624	1,187	12	230,254
	비율	84.4	10.8	4.0	0.3	0.5	0.0	100.0
대전 ↔ 충남	통행량	379,183	42,314	28,492	920	6,005	0	456,914
	비율	83.0	9.3	6.2	0.2	1.3	0.0	100.0
세종 ↔ 충북	통행량	93,490	19,313	1,429	17,532	771	13	132,548
	비율	70.5	14.6	1.1	13.2	0.6	0.0	100.0
세종 ↔ 충남	통행량	145,828	4,450	3,162	379	21	19	153,859
	비율	94.8	2.9	2.1	0.2	0.0	0.0	100.0
충북 ↔ 충남	통행량	113,037	11,700	5,540	692	1,254	374	132,597
	비율	85.2	8.8	4.2	0.5	1.0	0.3	100.0
합계	통행량	1,109,359	115,431	53,484	20,447	11,025	418	1,310,164
	비율	84.7	8.8	4.1	1.6	0.8	0.0	100.0

주 : 광역교통량은 주도시인 대전시와 주변도시 간 양방향 통행량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2018년」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전국 여객O/D 보완갱신」, 대전광역권 PA목적 OD 재작성

2040년 도시간 통행량을 분석하면, 2018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하며, 특히 대전-세종, 세종-청주, 천안-세종, 천안-홍성 등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중부권 2040년 통행량 분포도



IV. 중부권 광역교통체계 구축방

1. 도로망

중부권 장래 도로 교통은 대전, 세종, 청주, 천안, 홍성, 당진을 연결하는 축의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7. 현재 도로 통행배정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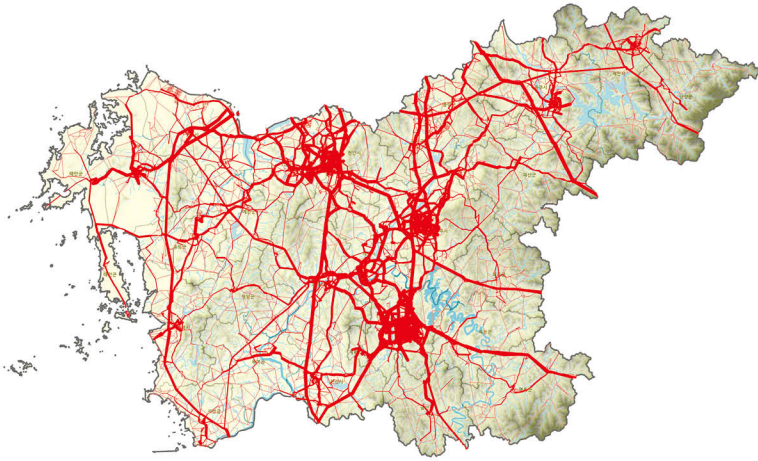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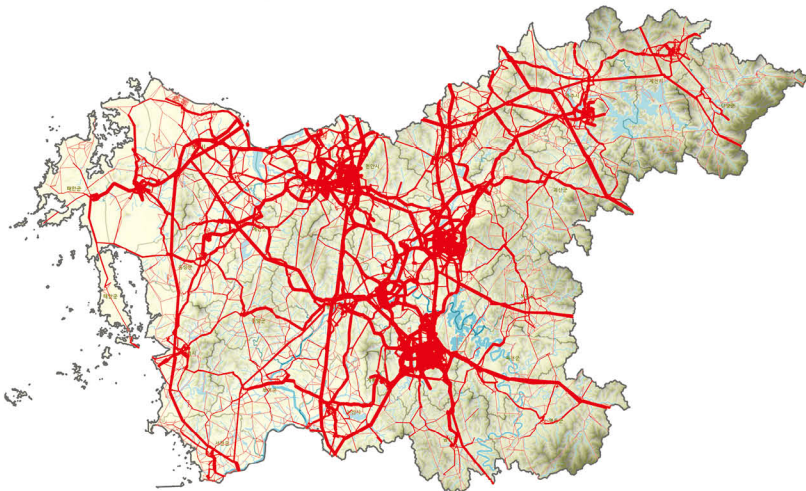


그림 8. 장래 도로 통행배정도(2040년)



중부권 고속도로망은 남북축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세종고속도로(제2경부), 서부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가 완공되면 남북축 고속도로망은 더욱 더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부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세종-청주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으나, 서해안과 대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없는 실정으로 보령(항만)-부여-공주-계룡-대전-보은-(영덕)을 연결하는 보령보은고속도로(국가기간교통망 4-1축)와 태안(태안항)-서산-홍성(내포)-세종(국가기간교통망 4-2축)을 연결하는 태안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필요하다.

대전과 세종, 청주, 공주 등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대전 주변 도시들 간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전시를 순환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및 경부고속도로가 이미 혼잡한 상태에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대전 주변 도시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포화된 대전 외곽고속도로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전(북부권)-세종-공주-계룡-금산-옥천-대전(북부권)을 연결하는 대전제2순환 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9. 중부권 고속도로망 구축 방안



세종시의 인구 증가로 세종시와 대전, 청주, 공주, 홍성(내포) 간에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들 도시 간의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

중부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부권 주요 도시와 청주공항, 대산항 및 보령항 등 물류거점과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림 10. 중부권 물류거점 연계체계 구축 방안



2. 철도망

중부권의 수송분담구조를 보면 2018년 현재 승용차가 85.1%를 담당하고 있으며, 버스 10.0%, 철도 2.3% 등으로 철도 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

대전과 주변지역의 대중교통 연계를 위하여 논산-계룡-대전-조치원-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광역철도 사업(계룡-대전 1단계 사업 추진중)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 호남선 고속화사업 등이 필요하다.

청주공항의 연계체계 강화를 위하여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추진중),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청주공항-제천 연박/추진중), 중부선 철도 건설사업(동탄-청주공항) 등이 필요하다.

서해안 지역 항만과의 물류체계 강화를 위하여 아산·석문산단선(합덕-아산·석문산단), 대산항선(석문산단-대산항), 중부권동서횡단철도(대산-청주-울진), 보령선철도건설사업 등이 필요하다.

그림 11. 중부권 철도망 구축 방안



V. 결론

중부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 세종, 청주, 공주, 천안, 아산을 포함하는 권역은 장래 거대 도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중부권이 거대 도시권으로 발전해나가고, 중부권 전체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광역교통망은 크게 간선도로망과 철도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중부권의 경우는 우선 발달된 남북 간 도로망에 비하여 동서 간 도로망 체계가 미흡하므로 보령보은고속도로(국가 기간교통망 4-1축)와 태안세종고속도로 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대전권 주변의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주변도시들을 연결하는 대전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 필요하다.

중부권의 교통분담구조는 대부분 도로가 담당하고 있고 철도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철도망 구축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대전, 세종, 청주, 천안 등 거점 도시간의 철도망 연결사업과 거점도시와 공항(청주공항) 및 항만(서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 연결사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2019), 2018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국토교통부(2019), 2018 철도통계연보
- 국토교통부(2019), 도로현황조사
- 대전시(2019), 2018 통계연보
- 세종시(2019), 2018 통계연보
- 충청북도(2019), 2018 통계연보
- 충청남도(2019), 2018 통계연보
- 충청남도(2018), 제2차 충청남도 지역물류기본계획(2017~2026)
-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 한국교통연구원(2019), 「2018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전국 여객O/D 보완갱신

-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 통계청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유럽연합의 클러스터정책 - 지역/광역/국가 협력프로그램

●
설 성 수 한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유럽연합의 클러스터정책 - 지역/광역/국가 협력프로그램

설성수 한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유럽연합의 클러스터정책 - 지역간 업종간 주체간 협력프로그램

어느 지역이나 지역발전 정책을 원하지만, 지역정책은 이해 당사자가 많아 조정이 힘들어 기술정책이나 산업정책에 비해 효과도 떨어지고 그렇기에 시도도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에서는 소속 국가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지역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시도가 있다. 클러스터프로그램이 그것인데,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지만 유럽연합에 속한 지역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특집에 맞추어 본 고에서는 이 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서설

1. 클러스터란?

클러스터(cluster)라는 개념은 마이클 포터의 '국가의 경쟁우위(1990)'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그는 클러스터가 다른 지역보다 경쟁우위를 가져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클러스터는 특정상품을 위한 기업들, 공급자, 관련 제도의 지리적 집중을 의미한다. 과거부터 존재해 온 산업집적은 기업체들이 특정지역에 단순히 밀집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클러스터는 특정 상품이나 산업을 위한 기업체들의 집적과 이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말한다.

포터는 캘리포니아의 포도산지를 예로 들며, 이 지역에는 포도농장과 포도주 관련 각종 공급업체,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잘 발전되어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클러스터는 관련 기업과 제도의 집적이기에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을 촉진하며, 추가로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도주 클러스터에는 관광산업이 또 다른 비즈니스로 추가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보다 강화된 개념의 클러스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클러스터는 유사한 업종을 위해 ①지리적 기반, ②연구와 혁신 중심, ③이업종 연계, ④기업가적 행동 및 ⑤임계규모라는 다섯 가지의 특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EU, 2013, p. 16-17). 일정규모 이상의, 유사한 업종을 위해, 근접해 있어야 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기업가정신으로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고, 관련된 업종들이 상호 협력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클러스터가 지역산업을 위한 핵심정책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들을 연계시키고 협력시킬 수 있는 데다, 특화나 글로벌화를 추구하도록 지원해 지역발전을 물론이고 유럽의 산업구조 전환의 중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2. 전 세계 클러스터조직 분포

〈그림 1〉은 유럽연합이 파악한 전 세계 클러스터조직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에 보여진 숫자만 본다면 총 1,078개 클러스터조직의 94%가 유럽에 집중되어 있어 유럽연합과 유럽 전 지역의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림 1. 세계 클러스터조직 분포



3. 클러스터 유형

클러스터는 어떠한 산업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신생업종 클러스터와 기존산업 클러스터로 구분된다.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는 플랫폼 구축형, 집합행동 추구형, 기업생태계 추구형 등이 있다. 한편 어떠한 발전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지역형, 기술형 및 업종형이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클러스터정책은 대부분 지역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술형이나 업종형은 다른 정책에서 시도되며 지역형을 돕고 있다.

클러스터 유형

1. 대상업종 기준: 신생업종형, 기존산업형
2. 추구활동 기준: 플랫폼구축형, 집합행동형, 생태계 구축형
3. 발전목표 기준: 지역형, 기술형, 업종형

II. 유럽의 클러스터정책 배경

1. 유럽의 반성과 클러스터정책의 시작

그러면 왜 유럽연합이 회원국 28개국 대다수에 걸쳐 이렇게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걸까? 그들은 클러스터가 유럽지역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가장 효율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유럽은 많은 회원국이 있고, 각 국가 내에서도 여러 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임계수준에 달할 정도로 크지도 못하고, 서로 경쟁적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도 서로 시너지효과를 보이는 기업의 집합이 아니라 관련이 없는 기업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경쟁의 이점을 찾기도 힘들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잘하는 곳만 모방하는 행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해당사자가 많고 항상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은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제적 혹은 초광역 관점이 부족하고, 또한 그러한 관점에 입각한 조정이 부족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유럽연합은 지역/중역/광역/범국가 등 여러 수준의 지역이 이업종간 나아가 여러 주체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 특화산업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곳을 유럽구조조정자금을 이용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각국 정부가 나서고, 최근에는 각급 지방정부 역시 클러스터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클러스터정책은 지역정책의 일환인데, 지역정책은 산업정책의 한 부분이다. 유럽연합의 산업정책은 크게 세 갈래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인력정책이고, 둘째는 기술정책, 셋째는 지역정책이다. 앞의 두 정책이 지역정책의 중요 수단이 되고 있고, 지역발전을 말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조직이 클러스터조직들이라 할 것이다.

클러스터정책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유럽연합 전체의 산업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클러스터정책은 많은 경우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클러스터정책은 ①혁신, ②특화 및 ③중소기업진흥 정책의 혼합형이라 부를 수도 있다. 물론 이 정책은 지역개발과 연계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이라는 개념은 혁신이나 특화 정책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혁신이나 특화 자체가 성장의 필수동력이라 클러스터의 혁신과 특화는 곧 지역발전의 수단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클러스터를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클러스터조직은 유럽연합 전체를 보면 평균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재원의 35%가 민간재원이다.

2. 법적기반과 정책대상

1) 법적 기반

유럽연합의 클러스터 정책의 법적기반은 2014년 ‘연구혁신을 위한 회원국 지원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클러스터 자체는 그 이전부터 여러 이름으로 가동되어 왔지만 유럽연합 전체에서 법적인 규정을 통해 지원을 시작한 것은 이 시점부터이다. 이 문서는 혁신 클러스터를 시설 공유 및 전문지식의 교환을 촉진하고 지식전달, 네트워킹, 정보보급 및 협업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클러스터를 기업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그 집합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클러스터의 임무와 금지 사항

임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적인 마음자세와 스킬 구축 - 성장, 경쟁력과 혁신을 위한 표준 이용 - 비즈니스 이전 활용 - 서비스혁신 지침 - 유럽연합 소기업법의 지역적용 - 유럽구조조정자금 이용 방법 -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 공공구매제도 활용 - 비즈니스엔젤 촉진 - 중소기업의 자원 효율성 향상 - 클러스터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기업 지원 - 정책담당자의 희망입안 - 나누어주기식 재원운용 - 반성없는 미래성장 추구 - 협소한 영역 추구 - 다른 정책 미연계 정책 - 내부지향형 클러스터 - 내부 파트너십 집중 지원

2) 정책대상

유럽연합의 클러스터정책 지침은 크게 보면 <표 1>과 같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별기업 지원, 정책담당자의 희망입안, 나누어주기식 운용, 반성없는 미래성장 추구, 협소한 영역 추구, 다른 정책과 연계 되지 않는 별개의 클러스터정책, 내부지향 클러스터 지원, 내부 파트너십 집중을 위한 클러스터 지원은 금지되는 것이다. 철저히 미래형, 선택과 집중형, 협력형, 외부지향형 클러스터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클러스터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클러스터를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클러스터를 조직화하기 위해 지역특성과 클러스터 특성을 먼저 규정하기를 권한다. 지역특성은 지역의 경쟁력, 역량, 정치력 및 위상을 말한다. 지역적인 위상이란 위치 특성과 특화 산업분야를 말한다. 클러스터 특성은 이러한 지역특성 위에서 클러스터의 목표, 정책창출과 이용, 범위설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위설정이란 참여 주체의 숫자, 재원규모 등을 말한다.

표 2. 클러스터 신설과 전환 시 고려사항

지역특성	클러스터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경쟁력 - 역량 - 정치력 - 포트폴리오(위치,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정책창출과 이용 - 범위설정(참여숫자, 재원)

3. 클러스터정책 원칙

지침은 이러한 활동은 모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첫째는 우선순위 설정이다. 두 번째는 통합된 정책수단이며, 셋째는 증거기반 정책이다. 넷째는 다층으로 제어되는 거버넌스이며, 다섯째는 국경을 넘는 커버넌스이다. 마지막 여섯째는 이해당사자 참여이다.

한편 유럽연합에는 어떠한 정책이든 기획, 집행, 모니터와 평가라는 정책사이클을 가지고 설계하고 운용하라는 정책원칙이 있다. 이 정책원칙의 첫 단계인 전략은 결국 클러스터의 매핑과 우선순위 도출 등을 통한 특화방향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인 실행은 클러스터조직의 구성과 서비스, 다른 클러스터의 벤치마킹, 국제화 지원 등의 평소의 활동 내용이다. 세 번째 단계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 개선과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것이다.

III. 클러스터정책 운용

1. 총괄

유럽연합에는 약 3,000여개의 클러스터가 있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클러스터 협력플랫폼(European Cluster Collaboration Platform, ECCP)과 클러스터관찰 기구(European Observatory for Clusters and Industrial Change: EOCIC)를 설치하고 있다.

협력플랫폼에는 1,000개 이상의 클러스터가 속해 있고, 10,000개 이상의 기업과 11,000개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속해 있다. 중대형 클러스터는 모두 속해 있다할 것이다. 이들은 매년 수 차례의 각종 콘퍼런스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추구한다.

클러스터관찰기구는, 유럽연합/국가/지역/지방의 클러스터 정책 입안자, 클러스터 관리자 및 중소기업 중개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유럽의 클러스터 및 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통계, 정보, 분석 및 매핑기관이다. 이들의 활동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클러스터 현황 조사, 클러스터와 산업구조 조사, 클러스터 활동을 측정하는 평가도구 제공, 클러스터정책 지침, 우수 사례 소개 등 다양하다.

클러스터관찰기구 활동

1. 격년으로 클러스터를 51개 지역, 10개 신산업종으로 구분해 변화 조사
2. 클러스터의 전환, 새로운 특화 및 신산업 조사
3. 유럽의 국가별 지역별 및 다른 나라의 클러스터 정책 조사
4. 클러스터 발전이나 산업변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 식별
5. 유럽 각 지역의 서비스혁신 평가
6. 범업종 협력, 혁신 및 기업가활동 자체평가 도구 제공
7. 전문가분석, 지역설문/벤치마킹 보고서, 평가자회의, 정책브리핑 제공
8. 클러스터간 파트너십과 성공적인 사례 지원
9. 클러스터정책 담당자를 위한 지침
10. 유럽 클러스터정책 포럼: 경험과 상호학습을 위한 4개 포럼
11. 기타: 온라인 발표와 출판, 뉴스레터, 비디오 제공

2. 클러스터 특화

수많은 클러스터가 있기에 유럽연합은 각 클러스터의 특화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이를 위한 스마트 특화 가이드¹⁾라는 지침을 제공한다. 스마트의 의미는 첫째는 연구와 혁신을 발전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지식자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특화를 위해 지식자원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클러스터나 지역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사업을 수행하라는 의미이다.

지역별 특화정책은 2012년에 만들어진 Europe 2020 Strategy를 위한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스마트 특화전략(RIS3) 다섯 가지는 우선순위 투자, 수월성 개발, 민간 투자 자극, 이해관계자 참여 및 증거기반 전략이다.

스마트 특화전략

1. 주요 국가/지역의 지식/ICT 기반 우선 과제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투자 집중
2. 각 국가/지역의 수월성 개발
3. 기술 및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투자 자극을 목표

1) EU (2012), Guide to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ies for Smart Specialisation (RIS3), 5, EU (2013), The Role of Clusters in Smart Specialisation Strategies, Directorate-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11.

- 4.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참여
- 5. 증거에 기반을 두고,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포함

특화를 위한 설계지침은 여섯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상황분석, 거버넌스 구조 설정, 지역 비전 설정, 우선순위 설정, 정책수단 수립 및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특화 설계 지침

- 1. 지역 상황 및 혁신 가능성 분석
- 2. 건전하고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조 설정
- 3.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공유된 비전 설정
- 4. 지역개발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 5. 적절한 정책수단 수립
- 6.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의 통합

클러스터의 특화는 자칫 클러스터 자체 개념과 혼동되어 이해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은 클러스터와 특화의 특화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먼저 두 개념은 실적 추구, 생산 성과 혁신 강조,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는 클러스터는 일정한 임계점을 넘는 업종간 집합을 말하지만, 특화는 새로운 지식영역, 새로운 시장기회, 혁신을 통한 경제 구조 전환과 같은 미래지향형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클러스터에 특화전략을 추가해 클러스터와 특화전략을 일치해 가려는 것이다.

표 3. 특화와 클러스터의 차이

특화	클러스터
새로운 시장 기회 추구	임계점
지식 파급효과 추구	외부효과
지식영역의 다양성 추구	관련 업종간 집합
혁신으로 경제구조 전환	연계된 기업의 실적 향상

3. 클러스터평가

1) 클러스터 평가지표

각 클러스터는 정기적으로 평가되어 우수성 정도에 따라 별(cluster star)을 받는다. 5개 영역에 대한 평가는 각 영역 3점, 총 15점이 만점이다. 5개 영역은 취업자 수로 파악한 규모, 지역비율로 파악하는 특화도, 취업자 평균임금, 고성장 중소기업 수, 나아가 1인당 부가가치 상위 5% 범위인 세계 선도기업 수로 평가된다. 배점은 처음 세 영역은 지난 3년 상위 20%에 별 1개, 매년 평가로 별이 추가된다. 네 번째와 다섯째 영역은 지난 수년간 유럽을 기준으로 상위 20% 별 3개, 상위 20-40% 별 2개, 40-60% 별 1개 등으로 부여된다.

어떠한 클러스터의 혹은 지역의 특화도는 지역비율을 통해 계산된다. 지역비율(location quotient)은 특화산업의 유럽 전체 대비 해당지역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1.5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이면 특화클러스터라 불린다. 반면 교역클러스터는 외부와 경쟁하며 많은 지역에 판매하는 클러스터를 말한다.

산업리더는 신생산업의 매출이나 수익률이 특정 지역, 광역, 국가 혹은 세계수준에서 상위 1%를 말하는데,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세계수준을 지칭한다. 글로벌 선두는 1인당 부가가치가 상위 5%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반면 이들보다는 조금 약한 고성장기업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10인 이상의 고용과 50만 유로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 중 매출, 고용 및 자산 성장률이 매년 20% 이상으로 3년간 지속된 기업을 말한다. 한편 고성장벤처는 3-20인의 고용, 50만 유로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으로 매출, 고용 및 자산 증가에서 1/2/3년 각 기간 상위 10%인 기업을 말한다.

2) 클러스터 스타 상위 지역

광역 단위에서 많은 별표를 보유한 클러스터 상위 20개 지역은 <표 4>와 같다. 독일이 국가 자체의 경제력을 반영하여 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태리 4개, 프랑스 3개, 스페인 2개이다. 유럽연합의 두 번째 강대국인 영국은 1개에 불과하고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헝가리 등에 각각 1개씩 분포되어 있다.

표 4. 클러스터 상위 20개 지역

	클러스터코드 - 지역	규모	특화	생산성	SME	혁신리더	계
1	DE71 - Darmstadt	30	15	24	25	30	124
2	FR10 - Ile-De-France	30	8	21	30	30	119
3	DE21 - Oberbayern	30	15	22	24	28	119
4	DE11 - Stuttgart	30	18	21	21	25	115
5	ITC4 - Lombardia	30	24	0	30	30	114
6	DEA2 - Koeln	30	4	30	21	28	113
7	NO01 - Oslo og Akershus	15	15	30	24	25	109
8	DEA1 - Duesseldorf	30	12	12	24	30	108
9	FR71 - Rhone-Alpes	30	6	12	30	30	108
10	SE11 - Stockholm	18	12	16	29	30	105
11	ITC1 - Piemonte	30	12	0	30	29	101
12	ES30 - Madrid	30	7	3	30	30	100
13	UKJ1 - Berkshire, Buckinghamshire, Oxfordshire	15	9	21	26	29	100
14	DE12 - Karlsruhe	30	20	9	14	26	99
15	ITH3 - Veneto	27	12	0	30	30	99
16	ITH5 - Emilia-Romagna	27	10	0	30	30	97
17	BE21 - Antwerp	6	6	30	24	30	96
18	ES21 - Pais Vasco	21	12	2	29	30	94
19	HU10 - Central Hungary	30	9	0	30	25	94
20	FR82 - Provence-Alpes-Cote D'Azur	13	5	21	27	28	94

주: DE=독일, FR=프랑스, IT=이태리, ES=스페인, SE=스웨덴, No=노르웨이, BE=벨기에, HU=헝가리

3) 단일 클러스터기구 우수 등급

한편, 개별 클러스터 중 우수한 곳은 별도의 평가를 요청해 골드, 실버 및 브론즈 등급을 부여받기도 한다. 신청기준은 실제 기술/업종/지역 클러스터로 최소 0.5인이 상근하고, 15개 이상의 참가주체 중 대다수가 민간참가자인 곳으로,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킹과 학습, 특화비즈니스 지원 등 5개 이상의 서비스와 2개 이상의 전략 우선분야를 보유한, 클러스터 플랫폼 등록 클러스터관리기구이다. 신청비용은 골드, 실버, 브론즈 등 등급별로 금액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수천 유로이다. 2020년 1월 현재 골드 90개, 실버 65개, 브론즈 271개가 부여되었다.

4) 범국가 우수 메가클러스터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범국가 우수지역이 선발되기도 한다. 2019년에 지정된 13개 지역과 참여 광역 클러스터 수 및 주관 국가는 <표 5>와 같다. 13개 메가클러스터 중 스페인이 주도하는 클러스터는 4개, 이태리 주도 4개, 프랑스 주도 2개, 독일 2개 및 루마니아 주도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범국가적인 클러스터 노력을 알 수 있다.

표 5. 우수 범국가 메가클러스터

특화분야	참여	주관	참여
플라스마기술	5	독 일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체코
조명	7	이태리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헝가리, 체코, 이태리
보건의료	4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BT	4	독 일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제조/섬유	5	스페인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포르투갈
섬유/유통	6	이태리	스페인, 체코, 스페인, 슬로바키아, 독일
철도	7	이태리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페인, 터키
교통	5	프랑스	헝가리, 독일, 네델란드, 포르투갈
식품/유통	5	스페인	스페인,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제로에너지건축	5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폴란드, 세르비아
스마트시티	5	스페인	스페인, 이태리, 불가리아, 독일
스마트에너지	6	이태리	프랑스, 헝가리, 벨기에, 프랑스, 벨기에
스포츠, 관광	5	스페인	네델란드,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IV. 클러스터정책의 결과

1. 클러스터와 일반지역 차이²⁾

2018년 말 현재 약 2900개의 클러스터는 유럽연합 전체의 고용에서 19%, 임금은 22% 수준이다. 조사대상 10개 업종별 일반적인 기업에 대비한 상대적인 위치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 13.5%, 글로벌화 143%, 고성장 기업 77%, 고성장 벤처 141%로 높다.

클러스터 관련 일반 추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수 클러스터일수록 신생산업 클러스터이다. 그런데 신생업종이 더 기업가적이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며, 더 디지털기술을 이

2) EC (2019), Trends in European clusters: results from the 2019 European panorama, trends and priority sectors reports published, DG-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12,17.

용한다. 당연히 신생업종의 실적이 좋다. 전반적으로 국제화 정도 차이는 크지 않으나 특화 클러스터는 더 개방적이다.

그림 2. 클러스터의 임금과 고용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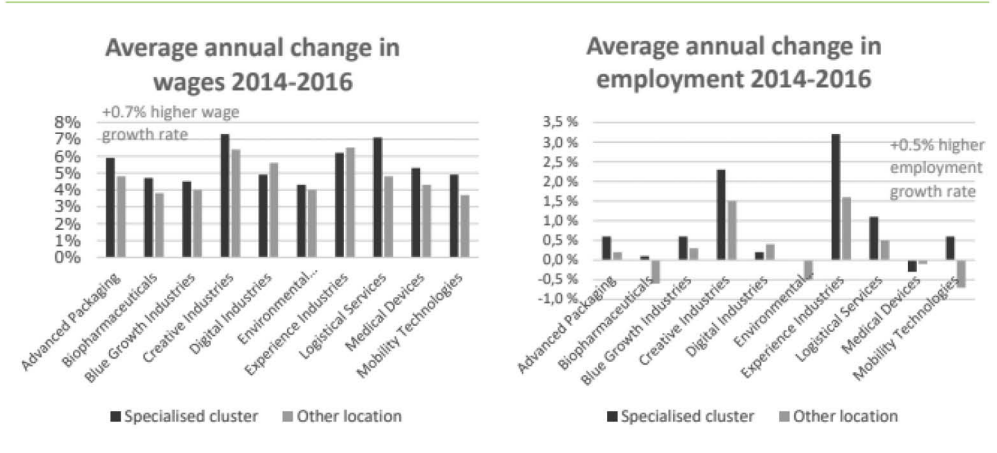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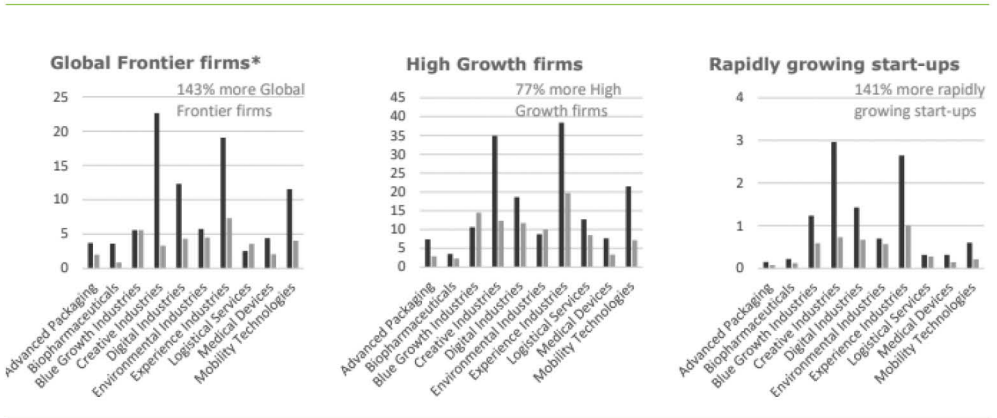


그림 3. 선도/고성장기업 실적



클러스터 실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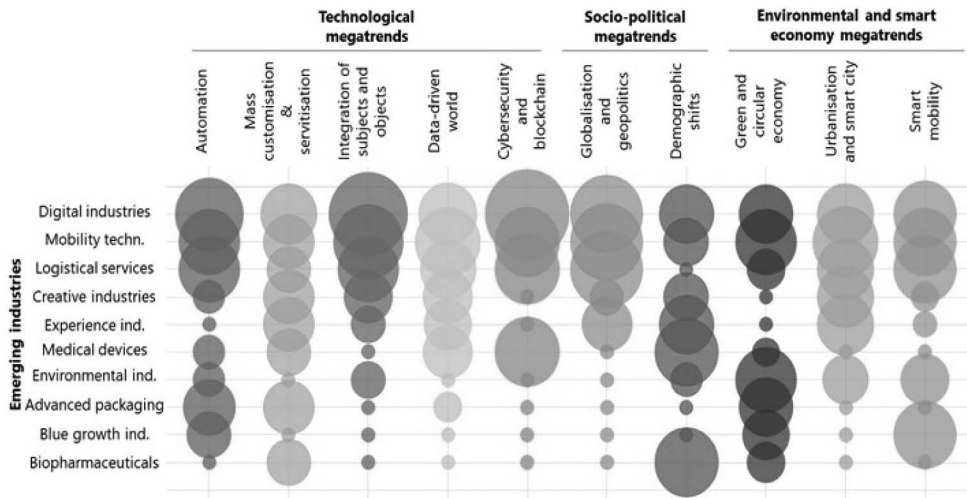
1. 별을 많이 받은 클러스터 지역이 신생산업 클러스터 지역
2. 신생업종이 더 기업가적, 더 많은 투자유치, 더 디지털기술 이용
3. 신생업종 실적이 더 큼
4. 국제화 정도 차이는 크지 않으나 특화 클러스터는 더 개방적
5. 첨단패키징, 바이오의약 업종이 가장 높은 3%대 성장

2. 산업구조 전환

유럽연합은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사대상 신산업종은 10개로 디지털산업, 차량, 물류서비스, 창조산업, 경험산업, 의료기기, 환경산업, 첨단패키징, 녹색산업 및 바이오의약분야이다.

산업구조 전환은 사회변화의 메가트렌드 추세와 신생산업을 연계시켜 파악한다. 메가트렌드는 장기적(20-50년 지속)이고, 독립적이며, 글로벌 현상이고, 지역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현상들을 말한다. 유럽연합이 파악한 메가트렌드는 기술적 메가트렌드, 사회정치적 메가트렌드 및 환경/스마트화 메가트렌드이다. 기술적 메가트렌드에는 자동화, 대량 맞춤형/서비스화형, 주체와 객체 결합, 데이터주도, 사이버보안과 블록체인이 포함된다. 사회정치적 메가트렌드에는 지구화/지구정치화, 인구구조 변화가 있다. 또한 환경/스마트화 트렌드에는 녹색/순환경제화, 도시화/스마트시티, 스마트차량이 있다. 대표적인 10개 신산업종을 3개 차원으로 연계시켜 파악한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 유럽연합의 산업구조 전환



V. 유럽 외 클러스터

1. 국제 클러스터

유럽연합의 클러스터 모니터팀은 지역내 클러스터의 상대적인 위치를 대단히 중요시 한다. 내부시각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이 되어야 특정 클러스터의 경쟁력과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파악한 유럽 외 지역의 클러스터 추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의 클러스터는 유럽과 다른 개념으로 기업집적의 의미가 크다. 중앙정부는 하이테크 구역이라는 국가 차원의 공업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1988년 북경 중관촌을 최초 지정한 이후 현재 31개 지역에 168개 구역이 존재한다. 물론 지방정부 차원의 하이테크 구역도 있다.

이스라엘은 지역클러스터보다 기술클러스터가 더 강한데, 농업투입물, 생명의학, 섬유, 가구, 의복, 인쇄, 금속, IT산업이 세계수준이다. 지역클러스터는 바이오연료와 에너지농업 클러스터, 전기차와 에너지저장 클러스터가 있다.

일본은 52개의 클러스터가 존재하는데 일부 클러스터는 유럽형과 비슷하지만, 대부분 관리기관, 연결기관 등을 가진 유럽형과 다르다. 주로 대학이나 국가연구소의 연구물 산업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52개 중 14개가 유럽과 교류하고 있고, 28개가 보건의료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많은 전자부품분야 클러스터는 6개이다.

미국은 연방차원에서는 중소기업청 지정 클러스터가 10개가 있는데 이 중 7개가 지역클러스터이고, 3개가 국방클러스터이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수십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지방차원의 클러스터 중에도 일부 성공적인 클러스터가 존재한다. 철강도시로 알려진 피츠버그 지역의 보건의료, IT 도시로의 전환, 노스캐롤라이나주 3개 도시 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Research Triangle Park), 보스턴 항구 근처의 항구혁신지역 등이 그것이다.

2. 유럽과 다른 지역 비교

유럽 외 지역의 클러스터나 클러스터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표 6>과 같이 국가에 따라 클러스터 설치 목적이 다르고, 정부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브라질, 대만, 멕시코는 지역차원이며 캐나다, 이스라엘, 중국, 싱가포르, 한국은 업종이나 기술 차원이다. 셋째, 아시아 국가는 하향식, 정부 주도 접근이다.

표 6. 국가/지역별 클러스터 설치 목적

목적	국가/지역
성장형 기업 촉진 하이테크산업 연구개발 촉진 특정 지식센터로의 전환 사회경제 효과 창조 균형개발 민간활동 자극	캐나다 캐나다, 중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멕시코, 타이완, 한국, 일본 미국
지역발전(특화, 글로벌화)	유럽

반면 유럽지역은 국가 차원에서는 전체 28개국 중 20개국이 클러스터만을 위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대부분 신생분야에 집중되며, 일부는 기존산업과 병행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주로 클러스터기구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49개 광역 중 38개가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클러스터의 목적은 지역혁신 및 특화 전략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관련되면 기존산업이 신흥산업보다 우선 지원되고 있다. 소요자금은 다양한 출처에서 조달되나 유럽구조조정펀드 등 공공자금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에는 특별한 이해당사자가 언급되는데 클러스터 조직이 대표적이고, 개인 또는 공공참여자 등도 언급된다.

VI. 교훈

1. 클러스터 자체의 교훈

클러스터는 정부의 규모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일부는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에 의해 지원되기도 하지만,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더 큰 수준의 자치단체가 개입되어야 하고, 일부는 광역 자치단체간 협력, 나아가 국가간 협력도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관리조직을 만들어 집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클러스터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거의 대부분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 특화 및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신생업종 중심의 지역특화를 원하고, 또한 국제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행정적인 지역의 범주를 넘어서서 다양한 수

준의 자치단체 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 운용에 있어서는 이업종간, 다양한 주체별 협력이 전제가 된다. 특화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업종이 서로 협력해야 하고,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협회 및 지방정부 역시 서로가 협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한국에의 교훈

한국은 전통적으로 지역별 클러스터보다 기술이나 업종클러스터가 강하다. 테크노파크나 연구개발특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프로그램이지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들 프로그램 역시 지역클러스터라 부르기 힘들다. 물론 광주의 광산업, 전주의 나노산업 등과 같은 일부 지역클러스터가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 혹은 지역이 관련되어 특정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내에서 광역 협력을 전제로 하는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이 시도는 자칫하면 지역범주가 너무 넓어져 기술클러스터나 업종클러스터와 같은 개념이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광역단위에서 지역적인 근접성과 유사성을 갖는 특화된 업종은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지방의 인구이탈과 수도권 집중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인천을 포함한 서울 근교지역은 계속 커지고 있고 지역은 점점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경향이 분명 존재한다. 소규모 특정지역 내에서의 협력뿐 아니라 지역간 협력도 지방의 산업을 위해 고려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European Commission (Izsak, Kincso et al.) (2016), The Smart Guide to Cluster Policy – a tool for cluster policy makers and stakeholders, EU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D-G for Regional and Urban Policy.
- European Commission (2014) Evaluation of Cluster Initiatives managed by DG Enterprise and Industry, DOI:10.2769/89710
- European Commission (2013), The Role of Clusters in Smart Specialisation Strategies, D-G for Research and Innovation, 11.
- European Commission (2012), Guide to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ies for Smart Specialisation (RIS3), Directorate-General for Regional and Urban Policy, 5.
- European Commission (2008) The concept of clusters and cluster policies and their role for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Main statistical results and lessons learned', including its glossary, Staff Working Document SEC(2008) 2637, available at <http://bookshop.europa.eu/en/the-concept-of-clusters-and-cluster-policies-and-their-role-for-competitiveness-and-innovation-pbNBNA23591/>.
- EOCIC (2019), Trends in European clusters: results from the 2019 European Panorama, Trends and Priority Sectors Reports Published, DG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12,17.
- EOCIC (Naumanen, Mika) (2019), European Panorama of Clusters and Industrial Change, EC D-G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 EOCIC (Sirtori, Emanuela et al.) (2019) European Cluster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Trends Report, EC D-G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December.
- EOCIC (Zenkar, Andrea et al.) (2019), Cluster Programmes in Europe and Beyond, EC D-G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대전세종포럼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72호



편집위원

위원장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위 원 **박근수** (배재대학교 여가서비스경영학과 교수)

설성수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온정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충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윤희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대전세종포럼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72호

발행일 2020년 3월 18일

발행인 박재욱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등록번호 대전중. 바00002

주소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제작 (주)유선애드플랜 (Tel.042-632-3007)

연구과제 제안 안내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세종시 각계각층의 연구요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지적교류와 정책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연구과제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www.dsi.re.kr) 시민의소리(연구제안)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DAEJEON
SEJONG
FORUM

www.dsi.re.kr